



■ 연구보고서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김문길 · 김태완 · 박창렬 · 여유진 · 우선희

【책임연구자】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2012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창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13년
저 자 김 문 길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가 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53-6 93330

1990년대 후반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전환을 경험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수준에 이르고, 전체 빈곤율도 OECD 국가에서 높은 집단에 속하는 등 빈곤율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유발되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일컬어지는 교육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계층이동의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이 상당부분 사교육에 의해 지탱되면서 사교육비 지불능력의 차이가 학업성취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더 이상 우리 현실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인적·물적·문화적 자본은 자녀가 선택할 수 없는, 타고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자본이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면 타고난 환경의 차이가 자녀의 성취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기회의 불평등을 측정해 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회정책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줄 수 있다. 타고난 환경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후적인 재분배 정책보다 사전적 재분배

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기회라고 하는 사전적인 접근법은 사회정책수단을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문길 부연구위원회 책임 하에, 여유진, 김태완 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 그리고 원외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박창렬 연구위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모쪼록 이 연구가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소득이동성을 제고하고 불평등을 시정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구성	26
제2장 기회의 불평등의 윤리·철학적 기초	27
제1절 롤스(Rawls) 이전의 ‘자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의 갈등	29
제2절 롤스(Rawls)의 정의론	38
제3절 R. 드워킨(Dworkin)의 자원평등론	43
제4절 A. 센의 능력이론	47
제3장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현황	53
제1절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55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기회	60
제3절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비 지출 수준	65
제4장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성취 -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77
제1절 문제 제기	79
제2절 이론적 논의	81
제3절 연구 방법	90
제4절 분석 결과	93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07
제1절 결론: 문화자본, 교육성취 그리고 기회불평등	109
제2절 정책시사점	111
참고문헌	115

표 목차

〈표 3- 1〉 성공에 필요한 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58
〈표 3- 2〉 교육기회에 인식 정도	59
〈표 3- 3〉 소득계층별 교육기회의 충족도 인식	60
〈표 3- 4〉 사회계층별 고등교육 진학자의 수능서열 분포	62
〈표 3- 5〉 부모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별 일반계고 졸업자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결과	63
〈표 3- 6〉 소득계층별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	66
〈표 3- 7〉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67
〈표 3- 8〉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68
〈표 3- 9〉 가구주 학력별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	70
〈표 3-10〉 가구주 학력별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70
〈표 3-11〉 가구주 학력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72
〈표 3-12〉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10)	74
〈표 3-13〉 GDP 대비 정부부담/민간부담 공교육비 상대적 비중(2005, 2010)	75
〈표 3-14〉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0)	76
〈표 4- 1〉 문화자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외 연구	83
〈표 4- 2〉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비교	89
〈표 4- 3〉 문화자본 변수의 조작화	92
〈표 4- 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	94
〈표 4- 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독서향유점수	95
〈표 4- 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문화활동점수	96
〈표 4- 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	98
〈표 4- 8〉 변수들의 상관관계	100
〈표 4- 9〉 학생의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결과)	101
〈표 4-10〉 학생 성별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결과)	103
〈표 4-11〉 영역별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결과)	105

그림 목차

[그림 3-1]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56
[그림 3-2]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변화	57
[그림 3-3]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	61
[그림 3-4] 학교유형별 전체 수능 응시생 수 대비 상위 1% 응시생 비율	64
[그림 3-5]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67
[그림 3-6]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69
[그림 3-7] 가구주 학력별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71
[그림 3-8] 가구주 학력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73
[그림 3-9]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 비중	75

Abstract <<

A Study on Measuring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Korea

Beyond the mere concern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outcomes, the concept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puts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e forefront when assessing socio-economic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Korea, edu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 ladder for moving upward. But nowadays, as education has become to have a serious relation to the parental socio-economic capabilities, moving upward class through education was getting hard.

Our research aim is to evaluate and quantify how family background in terms of cultural capital influences educational acquisition. We found that parental educational and economic capabilities significantly influence on children's cultural capital. Also cultural capital significantly influences on academic acquisition measured by SAT score.

We suggest that the concept of predistribution i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strument to compensate the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more detail, early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correct the bad environment for the disadvantaged families should be implemented.

I. 서론

1. 연구의 목적

□ 불평등의 공정성

- 개인의 성과와 분배의 결과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와 관련

□ 최근 행동경제학 일련의 연구결과

- 분배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인과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구분
- 공정성이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

□ 기회의 불평등 발생원인

-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교육의 격차, 가족환경의 차이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에서 기회의 불평등 상황을 실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II. 윤리·철학적 기초

1. 롤스 이전의 ‘자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의 갈등

□ 18,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관점과 평등주의의 관점

-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은 홉스, 로크, 스미스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자유주의 논의의 비판으로서 루소는 평등주의 원리를 지향
- 홉스의 자연 상태
 - 홉스의 자연법 사상은 비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져, 자유주의의 또 다른 원리인 ‘정치권력의 제한’에 위배
- 로크의 정치사상
 - 소유의 확대에 의한 불평등 소유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로크에게서 정의는 소유권의 자연성에 근거하는 자연적 정의를 의미
- 스미스의 사상
 - 불평등한 소유를 정당화하는 스미스의 분업론에서 노동에 반비례하는 소득분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
 -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모든 행위는 자유의 침해이며 동시에 정의를 훼손하지 못하게 됨
- 루소의 자연법 사상
 - 자연권이 상실되고 불평등이 발생하는 역사의 필연적 과정의 분석과 비판을 통해 자연권을 복원하고 유효화시키는 사회계약으로 역사발전의 규범을 제시

2. 롤스(Rawls)의 정의론

□ 정의의 두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제1원칙),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제2원칙)

○ 제1원칙은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이는 자존감의 기반으로서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불평등에 의해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므로 제2원칙이 필요

- 개인의 능력과 권리에 따른 차등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인정하지만 그 불평등은 거기서 발생한 이익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평등의 원인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

□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

○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국가

3. 드워킨(Dworkin)의 자원평등론

□ 평등이 정치공동체의 최고 덕목이라 간주하면서 평등을 '평등한 배려'로 정의

○ 평등한 배려는 재산이나 기회의 균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재산과 권리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정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를 말함.

□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 자원평등론은 구성원이 갖는 자원의 몫이 가능한 한 동일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수단적 혹은 과정적 평등을 강조
-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정의의 기본원칙. 또 이 원칙에 따른 분배가 진정한 평등으로 규정
 -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정의론이라 할 수 있음.

4. 센(Sen)의 능력이론

□ 롤스, 노직, 드워킨과의 차별성

- 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자원’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분배를 통해 인생의 목표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데 반해, 센은 자원보다 능력의 차이에 초점을 맞춤.
 -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분배를 통해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롤스 등 기존의 평등개념의 한계를 지적

□ 센의 자유의 의미

- 자유의 개념을 기회(목적)와 과정(수단)으로 구분
 - 기회로서 자유는 개인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 또는 능력에 초점
 - 과정으로서 자유는 선택의 절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

□ 센의 능력이론

○ 이상의 개념장치로 자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능력이론을 제시. 평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

- 합당한 평등과 합당한 불평등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 기본적으로 능력의 평등을 지향하지만 능력의 평등 공간만이 유일하고 그 외의 다양한 평등공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기회균등 개념과 차이

- 기회균등은 특정수단에 대한 균등한 이용가능성 또는 특수한 장벽이나 제약조건의 균등한 적용가능성으로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 능력개념은 사람들이 보유하는 자원이 아니라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또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임.

Ⅲ.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현황

1.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 기회의 균등에 대한 인식

○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2010년 18.4%, 2011년 14.1%, 2012년 16.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각각 48.3%, 42.2%, 45.5%)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들여다 볼 수 있음

(사회통합위원회, 2010~2012).

- 연령대별로는 50~60대의 경우 기회균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20~30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이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는 초졸과 고졸 집단은 기회균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대졸이상의 집단은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함.

□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기회 균등

○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회균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2012년 각각 22.1%, 28.4%, 25.8%로 나타남.

- 비교 문항 6개 중 각 년도 2위, 1위,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회균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줌.

□ 성공을 위해 중요한 조건 : 가족배경 및 사회자본

○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성공의 조건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다음으로 ‘사회적 인맥(1.93점)’을 들고 있음(ISSP, 2009).

- 사회적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 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같은 아시아국인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 밖에도 부유한 가족의 중요성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족배경과 사회자본을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교육기회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회가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좋은 고등학교 졸업자만 대학을 간다’, ‘부자라야 대학교 학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기회

□ 교육기회와 직업적 성취 및 소득 수준의 관계

- 평등한 교육적 기회의 제공은 귀속적 지위인 신분에 기초한 전근대적 계층체제로부터 개인의 능력 및 업적에 기초한 산업사회 계층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
- 따라서 교육기회의 분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
 - 교육기회는 고등교육 기회나 학력 등의 양적 측면과, 학업성취 정도나 학벌 등의 질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양적 측면에서 교육기회 : 고등교육 진학 현황

-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대학진학률, 즉 교육기회의 획득 자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어 계층 간 교육 기회는 2000년에 비해 균등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한 연구는 위와 같은 대학진학 여부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함(김미

란·박병영, 2009).

□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기회 : 4년제 및 상위권 대학진학 현황

○ 전문대 대비 4년제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효과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며, 상위권 대학진학으로 한정할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의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밝히고 있음(방하남·김기현, 2002; 김미란·박병영, 2009; 류방란·김성식, 2006; 변수용·김경근, 2010; 김위정 외, 2013).

- 방하남·김기현(2002)의 연구에서는 진학한 과의 수능서열분포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능서열분포도 상위범주로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줌.

○ 교육부의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응시자 상위 약 1% 학생의 지역, 학교설립유형, 학교유형 등이 상당히 편향된 것을 보여줌.

- 지역별로는 전체 학생의 23.5%를 차지하는 서울 출신 응시생들이 상위 1% 응시생의 37.2%를 차지했고, 전체 학생의 5.1%에 불과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 응시생들이 상위 1% 응시생의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유형별로는 국제고 23.6%, 외고 10.2%, 지역단위 선발자사고 8.3%, 영재학교 5.0%, 자립형사립고 3.1%, 과학고 1.6%, 일반고 0.6% 순으로 나타남. 일반고에서 상위 1%에 들어갈 확률은 국제고의 1/40에 불과한 것임.

3.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비 지출 수준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비 지출

-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교육기회는 양적 차원보다는 질적 차원에서 계층별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질적 차이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본 부분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수준 비교를 통해 교육기회의 불평등 실태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 2012년 현재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지출은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에 비해 약 4배를 지출하고 있음.
 - 이러한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2003년~2007년 약 4배 수준에서 2008~2009년 약5배로 높아졌다가 2010년 이후 다시 4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교육비 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현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경상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부담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이래 지속되고 있음.
- 반면 소비지출에 비추어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저소득층의 경우 절대적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낮지만, 경상소득 대비 비중은 크며, 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낮은 1분위를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의 낮은 사교육비가 의식주 등 필수 소비지출로 인한 예산 제약의 결과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음.

□ 가구주 학력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 가구주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약3배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가구보다 약2배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 가구주의 학력은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모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 및 전문대졸 이상 졸업 가구에서는 대체로 지출 비중의 증감폭이 작은 것에 반해 중학교 졸업 가구에서는 그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저학력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다른 소비지출에 비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교육비 지출 수준 국제 비교

-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는 우리나라 교육기회의 한 단면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임.
- 2010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덴마크(8.0%)

와 아이슬란드(7.7%)에 이어 세 번째로 공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음. 이는 OECD 평균이 6.3%인 것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OECD, 2013).

- 그러나 이 중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4.8%로 나타나 OECD 평균 5.4%보다 낮은 실정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 비중은 칠레,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임.

IV.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성취

1. 문제제기

□ 교육성취에 대한 연구 동향

- 지금까지 아동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부모의 물질적 자원이나 학교 자체의 자본(강남, 특목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장미혜, 2002; 김경근·변수용, 2007; 남현숙·김혜숙, 2013).

□ 교육성취와 문화자본

- 본 연구는 기존의 물질적 자원 중심의 불평등 개념 구성을 좀 더 다원화함으로써 복잡한 사회구조와 계층 형성 및 이동 메커니즘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가진 물질적 자본 뿐 아니라 문화

자본의 향유 수준이 학생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연구 자료

-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1차 및 4차년도 원자료 활용
 -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 연구 가설 : 디마지오의 기본 가설을 한국에 적용

-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문화자본의 양과 형태를 결정함.
- 둘째,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문화자본은 자녀의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셋째, 문화자본 변수를 도입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는 크게 감소함.

3. 분석 결과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문화자본의 양과 형태와의 관계

-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각각 학생의 문화자본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 어떤 변수도 학생의 독서향유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반면, 학생의 문화활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는 주로 학력변수로 나타났음. 즉,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화활동 수준이 더 높았음.

○ 가구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의 문화자본 수준이 학생의 문화자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 가구의 독서환경과 문화향유 변수는 모두 학생의 독서향유와 문화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의 독서향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반면, 어릴 때 부모가 종종 책을 읽어주었거나, 집에 책의 보유량이 많은 학생은 독서향유 수준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문화자본과 교육성취의 관계

○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수능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수능점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수능점수는 체계적으로 높아졌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통제하고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능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나 사교육비는 수능점수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그러나 사교육을 받기 전 학생의 성적이나 지능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교육비가 학생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음.

○ 가구와 학생의 문화자본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 모든 문화자본은 수능점수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독서환경과 학생의 독서향유, 그리고 가구의 문화활동비는 학생의 수능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이에 비해 학생의 문화활동은 수능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문화자본이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와 같은 수능 영역별 점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 문화자본 중 특히 독서환경과 독서향유는 수리영역을 제외하고는 학생의 수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언어영역의 수능점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비해, 문화활동은 수능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탐구영역에서는 독서환경과 독서향유 모두 수능점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활동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리영역에서는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외국어의 경우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독서환경과 독서향유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독서향유의 영향력은 언어영역에 못 미쳤음.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연구의 목적

- 최근 갈등론적 시각의 경제적 재생산이론, 문화적 재생산이론, 저향이론과 경쟁론적 시각의 선별이론, 계층경쟁론이 부각되고 있음.
 - 최근 인적자본 육성과 사회이동의 도구로서의 교육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음.
- 기회의 불평등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윤리·철학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우리나라에서 기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 한편, 부르디외의 문화적 재생산이론에 기초,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자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결과

-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학생의 독서향유 형태의 문화자본보다 문화활동 형태의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침.
 - 문화활동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독서향유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

- 문화향유는 주로 휴일을 이용함에 따라 사교육과의 상충성이 크지 않은 반면, 독서향유는 일상적 활동으로 사교육과의 상충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큼

○ 문화자본은 수능 성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나 교육수준을 통제하고도 문화자본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쳤으며,
-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독서향유 활동은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 모두에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 반면, 문화활동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수능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2. 정책 제언

□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정부 정책 필요

○ 기회의 불평등이 교육성취,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

- 정부개입은 도덕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뒷받침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써의 사전분배 정책

○ 사후적 재분배정책은 사회불평등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미한 효과

○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비인지 능

력을 계발할 수 있는 정책은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효과적

- 동시에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도 비교우위

□ 사전분배 정책의 두 가지 과제

- 정책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과제로써,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와 관련
 - 세계은행의 인간개발지수(HOI)를 참고할 수 있음.
- 기존의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 기존의 사후적 재분배 정책과 사전적 재분배 정책간 자원배분의 문제
 - 수월성 위주의 교육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1절 연구의 목적

불평등의 윤리적, 철학적 접근에 의하면 ‘공정한 불평등’과 ‘불공정한 불평등’, 그리고 ‘공정한 평등’과 ‘불공정한 평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우리의 관심사는 불평등의 공정성이다. 즉, 시장(혹은 교육현장)에서 개인의 성과와 분배의 결과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의 관심사다.

행동경제학의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공정’과 ‘정의’의 관념이 개인의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Fehr and Schmidt, 1999; Fehr and Gächter, 2000; Fehr and Fischbacher, 2003), 나아가 최근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결과의 분배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요인들과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을 구분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Cappelen et al., 2010). 공정성이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하다면 불평등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관찰한 불평등이 얼마나 공정한지 혹은 얼마나 불공정한지에 의거해서 분배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불공정한 정도’를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다시 다음 세대의 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칼도의 전통을 잇는

일련의 학자들의 관점을 빌면, 기회의 불평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스티글리츠의 말처럼 “단순히 윤리적 관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tiglitz, 2013).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다.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¹⁾에 따르면 세계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줄어들었지만 2000년대 후반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실업률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임시 계약직 비율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경기충격에 취약한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010년 54.5%로 남성의 77.1%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간 임금격차도 39%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²⁾ 최근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추월했고, 사법시험 등 각종 고시에서도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아지고, 수석합격자도 여성이 차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학업성취도가 남성에 비해 높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들의 학업성취도가 남성들보다 높아졌음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같은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관행이 만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교육의 격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 ILO(2012),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Women 2012.

2) OECD(2012)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유럽은 교육제도 민주화에 주력하면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다. 미국도 G.I.Bill(제대군인원호법)에 따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 덕분에 인종차별은 많이 줄었지만 경제적 차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tiglitz, 2013). 1980년 이후 경제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그 결과 교육성취도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에 태어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의 학업성취 격차는 25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격차보다 30~40%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고된다(Sean F. Reardon).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서 밝힌 것처럼 경제력에 따른 학력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는 환경, 즉 가족환경이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읽을거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위험환경으로부터 더 많이 보호를 받으며, 음악레슨이나 미술레슨 등 문화적으로 많은 기회를 얻는 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와 반대의 환경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양이나 위생, 보건의 측면에서도 부유한 집의 아이들과 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차이를 가진다. 또한 가정환경에 따른 스트레스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은 학습능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기회의 불평등 상황을 실증함으로써 관련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윤리·철학적 기초를 소개한다. 롤스 이전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에서 평등의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롤스, 드워킨, 센으로 이어지는 정의론적 관점에서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기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관련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배경, 즉 기회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볼 것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를 이용하여 문화활동, 독서향유 등의 환경변수가 수능점수로 측정되는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규명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제언을 덧붙이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이다.



제2장 기회의 불평등의 윤리·철학적 기초

제1절 롤스(Rawls) 이전의 '자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의 갈등

제2절 롤스(Rawls)의 정의론

제3절 R. 드워킨(Dworkin)의 자원평등론

제4절 A. 센의 능력이론

2

기회의 불평등의 << 윤리·철학적 기초

제1절 롤스(Rawls) 이전의 ‘자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의 갈등³⁾

근대적 인간은 사회가 부과하는 목적에 의해 자신의 행복 추구가 실현 또는 강요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자신에 대한 전권(ius in omnia)을 갖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이상 사회로부터 무관한 진공 상태의 개인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 개인의 행복 추구의 자기결정권도 사회의 공동규범 안에서 확립되기 때문이다. 이 때 근대적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공동의 규범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문제는 사적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소유(ius et dominium) 그리고 개인적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 전체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더 나아가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는 어떻게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하는 가라는 문제로 전개한다.

이러한 근대성 문제에 직면하여 ‘자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의 갈등 관계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철학, 정치, 법, 윤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상체계에서 이루어져왔다. 근대 자본주의사회가 갖는 근원적 화두는 위의 근대성 문제에 귀착하고, 18,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육체적, 도덕적 관점이 아닌 법과 권리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

3) 박창렬, ‘근대 자연법사상과 경제적 자유주의’(『경제학연구』, 제47집 제3호, 1999년)의 내용 일부를 요약 및 재정리하였고, 루소관련 부분은 새롭게 작성.

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18세기 인권선언을 고취시켰던 자연법사상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주의는 T. 홉스(Hobbes), J. 로크(Locke), A. 스미스(Smith)에 의해 완성되고, 이와는 반대되는 축에서 J-J. 루소(Rousseau)는 이들 자유주의 논의의 비판으로서 평등주의 논의를 전개한다.

홉스의 정치철학은 계약 개념으로 시민사회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리바이던』(Leviathan, 1651)의 전체적인 논리 전개는 주지와 같다. 출발점은 자연상태와 사회상태(시민사회)의 가설적인 구분이고, 양자는 정반대의 상태이다. 전쟁상태인 자연상태에서 평화상태인 시민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의 자발적 동의 즉 계약에 의해 개인의 모든 권리를 정치권력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치권력의 담당자인 국가는 절대적 통치권(absolute sovereignty)을 소유하여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홉스가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전개되는 전쟁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자연상태에서의 개인의 자연권과 그것의 자유로운 사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연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자연권을 평등하게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무한한 권리로서 자연권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개인의 궁극적 목적 또는 최고의 선(summum bonum)은 ‘자기보존’이다.

‘자기보존’의 정치철학자인 홉스는 자연권에서 자연법을 도출하면서 사회구성 이전에 인간이 갖는 자연권에 대한 사회의 규제와 침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이것은 홉스가 사회라는 전체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의무에 앞서 개인의 목적과 권리를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홉스가 자연권과 자연법의 관계를 역전시킨 근대성은 바로 자연법사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라는 전체에 대한 개인이라는

개별의 우위에서 사회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근본 원리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물론 홉스의 절대주의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그 권력의 절대성만큼 절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자연권의 양도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절대적 통치권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하지 않은 홉스의 자연법사상은 비자유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홉스의 자연법사상은 자유주의의 또 다른 원리인 ‘정치권력의 제한’에 위배된다. 모든 정치권력은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부르주아적 소유권을 정당화시킨 로크가 홉스의 정치이론의 귀결은 여우의 발톱(홉스가 말하는 전쟁상태로서 자연상태)을 피하려다 사자의 이빨(절대적 통치권을 가진 라바이던의 합법적 폭력)에 물리는 격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로크의 정치사상은 사실 정치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권력의 제한을 주장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자연법사상에서 제시하는 소유이론에서 찾아진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을 소유(property)라 명명하며, “인간들이 공동체로 단결하고 정부에 복종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그들 소유의 보존”이라고 말한다(Locke, 1988).

홉스의 ‘자기보존’과 로크의 ‘소유의 보존’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로크는 홉스와는 달리 소유권의 자연성과 비계약성을 주장하고 둘째, 부르주아계급에게 배타적이고 사적인 개인주의적 소유의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소유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점이다.

소유권의 자연성과 관련하여 소유권은 시민사회가 성립되기 전 그리고

시민사회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개인의 자연권이다. 즉 소유권은 인간이면 그가 시민사회 또는 자연상태라는 규정과 관계없이 신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갖는 자연권이지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다. 이처럼 로크의 소유권 개념은 정부가 자의적이든 계약을 통해서든 개인의 자연권으로서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그리고 소유의 확대와 관련된 로크의 개인주의는 소유가 노동에 기원을 둔다는 면에서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지적한다. 개인의 노동능력이 다른 개인보다 탁월해 소유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개인의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사회적 분업체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노동생산성 증대의 기원이 개인적 노동능력에서 유일하게 기인한다는 면에서 로크의 소유이론을 개인주의적 소유이론이라 규정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이러한 소유의 확대를 합법화하는 로크의 개인주의적 소유이론은 화폐를 도입하면서 그 본질적 특징이 나타난다. 화폐의 역할은 개인의 소유권을 확장시키는 것으로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자연적 생산물의 가치를 보존증식시킨다. 자연적으로 부패하는 재화를 부패하지 않는 재화와 등가교환시키는 화폐는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동시에 그 축적에 도덕적·물리적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결코 부패하지 않는 화폐형태로 소유를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낭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전환은 소유권의 근원은 노동에서 분리되어 화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이다. 노동을 통해 사적 소유권자가 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즉 합법적 소유권자는 더 이상 노동자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로크의 소유이론의 출발점인 노동, 소유권, 개인의 삼중관계에서 개인은 노동과 소유권을 매개하는 공통분모이다. 개인을 축으로 노동과 소유

권이 서로 순환하며, 노동은 소유권의 기원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론의 도달점은 노동과 소유권은 그 순환에서 벗어나 그 축이었던 개인은 소유권자와 노동자로 분할되며 동시에 부자와 빈자로 구분된다.

C. B. 맥퍼슨은 화폐의 발명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소유의 발생과 소유의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는 로크의 개인주의적 소유이론의 계급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로크의 소유이론은 부르주아적 소유를 위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 그의 소유이론의 전체상은 불평등한 소유뿐만 아니라 무제한적인 개인적 소유의 자연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다(Macpherson, 1962).”

결론적으로 소유의 확대에 의한 불평등 소유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로크에게서 정의는 소유권의 자연성에 근거하는 자연적 정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적 정의의 산물인 불평등 소유를 교정하려는 정치권력의 모든 인위적 간섭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기본적 자연법에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소유권의 자연성을 연역하는 로크의 자연법사상은 자유주의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며 그의 자연적 정의는 이후 A. 스미스(Smith)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통해 경제적 자유주의로 재현된다.

스미스의 사상적 과제는 근대 자연법사상의 유산(개인의 권리, 소유, 자유의 관념)을 이어받으면서도 다른 한편, 그것에 은폐되어 있는 공리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동시에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공화주의사상이 사회의 상업화 과정에서 제기한 ‘부와 덕성’의 대립을 도덕감각의 주체인 개인의 이기심 추구를 인정하고 그것의 자율적인 사회적 규제원리를 제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근대 자연법사상은 ‘상업의 체계’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정치권력의 성립에 기여하면서 개인의 소유권 보장을 주장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 개

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홉스는 물론이고 소유권의 양도 불가론을 주장한 로크는 “사회의 이익, 번영 및 안전에 필요한 정도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 향하는 그의 자연적 자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의에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Locke, 1988). 이처럼 근대 자연법사상이 정부에 의한 소유권의 규제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의 공동규범으로서 정의의 관념이 개인 간의 계약과 동의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이다. 즉 소유권의 성립근거가 정부에 의한 소유권 보호에서 생기는 공공적 효용이라는 이성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적 개인의 소유권의 이용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명예혁명 체제를 성립시킨 근대 자연법사상은 공익의 관점에서 중상주의적 독점정책의 입법화와 실행을 요구하는 ‘상업의 체계’를 변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상업의 체계’의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스미스에게 정의의 관념은 이성에 의한 공공효용의 증대라는 인식에서 도출하는 근대 자연법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상업사회 기능의 공리주의적 원리를 청산하고, 그것에 동감(sympathy)의 원리로 대체하여 자연적 자유의 행사가 결국은 공익을 실현한다는 신의 ‘보이지 않는’(자유) ‘손’(효율)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자유는 곧 효율이 된다.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는 『도덕감정론』 서두에서 밝히듯이 서로 상반되는 인간본성의 감정적 표현인 이기심과 이타심을 서로 모순되지 않게 융화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중심 개념이 “상상 상의 입장의 교환”이다. 입장의 교환을 통해 공평한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감정과 행위의 적의성의 기준을 인지하여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편애성을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것이 바로 동감의 원리이다. 이처럼 스미스의 동감 개념은 개별 개인의 이기심의 추구하고 입장 또는 이해의 차이를 전제하고 인정한 후에 입장의

교환을 통해 각자 내면의 공평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기심을 자제함으로써 사회의 질서와 조화의 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사상체계에 부여되는 긍정적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근대 자연법전통과 공유하면서 동시에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평등한 소유를 정당화하는 스미스의 분업론에서 특이한 점은 노동에 반비례하는 소득분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자연법학자들은 노동에 의해 획득되는 소유를 주장함으로써 소유의 불평등이 원초적으로 노동의 차이에서 유래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소유의 불평등이 노동을 자극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노동과 소유가 비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노동에 반비례하는 소유의 불평등이 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지배노동-가치로 설명함으로써 불평등소유론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다. 다시 말해, 상업사회에서 교환의 이득은 분업생산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증대 즉 투하노동의 절약을 통해 교환 상대 상품에 투하된 보다 많은 노동량에 대한 지배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분업론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소유의 정당화는 효율의 증대에 따른 필요의 만족이라는 효율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어진다. 이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는 “가장 빈곤한 사람의 비참을 희생해서 공민적 덕성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고, (...) 사람들이 소유권과 시민권에서 불평등해도 기본적인 필요를 만족할 수단을 갖는다는 점에서 평등하다”(Hont and Ignatieff, 1983)는 것이다. 이처럼 스미스에게서 시장경제로 운영되는 자본주의사회는 평등하지도 않고 공민적 덕성도 부재하지만 그렇다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시장의 언어로 말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하면 소유의 불평등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의

불평등은 개인의 이익 추구의 자유로운 선택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모든 행위는 자유의 침해이며 동시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된다. 결국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국가권력의 시도는 개인의 권리와 소유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고 정의를 파괴하는 합법적 폭력에 불과한 것이다.

로크와 스미스의 사상체계가 자유주의의 복음서라고 한다면, J-J. 루소의 자연법사상은 국가주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루소의 정치철학이 지향하는 도달점은 일반의지의 담당자인 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평등주의적 자유의 실현이다. 이 때문에 루소의 사상에는 대립되는 두 원리인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뒤섞여 공존하고 ‘지배와 복종의 일치’ 또는 ‘정의와 이익의 일치’ 등의 역설적이고 변증법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⁴⁾

루소는 이전의 사회계약론자와는 달리 불평등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통해 자연상태에서의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의 이름으로 재획득하기 위하여 개인들의 결합형식인 정치조직을 제시한다. 이 정치조직은 지배와 종속 또는 주인과 노예의 불평등한 대립관계를 극복하는 그래서 지배와 복종이 일치하는 일반의지의 정치공동체를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루소는 주인과 노예가 자가지배권 즉 자치인 자유가 상실되는 불평등한 종속관계(비교와 차등의 쇠사슬)에서 다시금,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일한 상관관계(동등의 쇠사슬)를 맺게 하는 일반의지의 정치공동체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루소에 의하면 인간이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는 능력”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Rousseau, 1964)이며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발생시킨다.

4) 루소는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1762) 서두에서 자신의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쇠사슬에 얽매어 있다. 인간 자신은 타인의 주인이라 생각할지라도, 사실 그 타인 이상으로 노예이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알지 못한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었는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Rousseau, 1964)

이 능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유하는 능력 즉 이성의 발전으로 전개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사회적 삶은 상호의존적이 된다. 그런데 사회적 삶은 자기애(amour de soi)를 자존심(amour propre)으로 변형시켜 인간을 “자연 밖으로 몰아내고 자신과 모순관계에 놓이게 한다”(Rousseau, 1964). 즉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상호 비교구조 가운데 인간관계는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신만을 고려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타자를 생각한다. 존재의 동일성으로 자기애를 가진 자연적 인간은 시민사회에서 공적인 평가 즉 타자의 의견에 의존하는 인위적 인간이 된다. 자신을 완전하게 하려는 욕구인 자존심 때문에 일등주의가 만연하여 불행감과 도덕적 부패가 생겨 자기분열하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상호의존적 인간관계는 차등에 의해 구별되는 적대적이고 불평등한 구조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사회의 법은 어떠한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불평등구조를 본질로 하는 시민사회는 부자와 빈자 그리고 강자와 약자의 지배-종속관계가 만연하는 전쟁상태이다.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구성과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루소의 변증법적인 표현에 의하면 부자는 사실 약자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연적 필요 이상의 소유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 약자인 부자는 약자인 빈자의 소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인 약자의 힘을 갖고서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는 평화와 정의의 법의 제정과 정부구성을 주장한다. 부자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위약함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이며 동시에 부자에게 유리한 불평등구조를 영속화시키는 길이다.

루소는 개별 개인을 전체의 분할될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하는 정치공동체인 일반의사의 국가로의 권리의 전면적 양도는 “그 이전[자연상태]과

동일하게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보았고, 이것이 “사회계약이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단정짓는다(Rousseau, 1964). 또한 전면적 양도는 모든 개인의 사회적 조건을 평등하게 하고, “자신이 양도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받지 않는 어떠한 개인도 존재하지 않는다”(Rousseau, 1964). 따라서 조건의 평등인 정의는 모든 인간에게 이익으로 되고 개별 개인의 이익추구와 사회 전체의 이익의 조화를 의미한다. 결국 소외된 자유와 권리를 재획득하여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질서를 에밀(Émile)과 같은 인간 또는 시민의 교육과 육성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루소는 이성에 의해서 자연권(자연적 자유와 자연적 평등)이 상실되고 불평등이 발생하는 역사의 필연적 과정의 분석과 비판을 통해 자연권을 복원하고 자연법을 유효화시키는 사회계약으로 역사발전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루소는 사회화된 개인의 자연권의 이상에 일치하는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동시에 근대성의 문제를 자유주의적 전망이 아닌 그것의 비판적 대안으로서 평등주의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절 롤스(Rawls)의 정의론

롤스는 자신의 ‘공정으로서 정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어서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황경식, 1985).

롤스는 이전의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사회계약론자들의 자연상태와 사

회상태의 구분 그리고 사회관에 대한 규정과 유사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롤스는 사회를 자신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의 협동체로 간주하며, 자연상태와 비슷한 가상의 ‘원초적 입장’을 상정한 다음에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공정한 협동체가 되도록 하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선 롤스는 경제 및 사회 정책에 대한 규범적 명령으로서 자신의 정의론의 구성적 요소를 검토한다. 사회구성원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은 공리주의의 효용이 아닌 ‘기초재’이며, 이것은 사회적 기초재(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소득과 부, 자존감)와 자연적 기초재(건강, 정력, 지력, 상상력)로 구분된다. 정의론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초재는 다양한 가치들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효용의 개인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의 의도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후생수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구조화하는 조건들을 정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롤스의 정의론은 철저하게 규범이론이고, 이 틀 안에서 개인의 자율성은 후생보다 중시된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들이 ‘무지의 베일’에 싸인 원초적 입장에 기초하는 기본구조를 개념화한다. 원초적 입장은 사회의 기본구조가 아무 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그 구성에 관하여 어떠한 원칙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어떤 계층에 속하게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더구나 사회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재능, 능력, 지력, 체력 등 자연적인 자질도 전혀 모른다. 이러한 무지의 베일 속에서 구성원들은 앞으로 이를 사회에 적용될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데, 어떠한 원칙을 택하는 것이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므로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선택을 하게 되므로 도달한 합의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지의 베

일은 공정성의 확보 즉 정의의 원칙에 대한 특정 이익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순수한 가정인 무지의 상태의 원초적 입장은 사회구성원 간 이해의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로서 절차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합의된 경우 그 절차에 따른 결과는 항상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것이 롤스의 정의론을 ‘순수한 절차적 정의’, ‘공정으로서 정의’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는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하는데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두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할당과 사회적·경제적 이득의 배분을 규제한다.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동등한(정치적 영역의) 기본적인 자유(인간의 존엄성, 신체·사상·언론 및 출판의 자유 등)를 보장하고 이 기본적인 자유는 자존감의 기반으로서 정치·사회적 계산 및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와 부의 수단의 불평등에 의해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원칙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권리에 따른 차등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그 불평등은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차등의 원칙)하고, 불평등의 원인(사회적 지위, 부의 획득 수단 등)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기회균등의 원칙)되어야 한다.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의 기회균등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이것은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가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고, 정치 권리나 자유를 포기한 대신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황경식, 1985).

롤스에게서 불평등의 정당화는 정의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는 원초적 입장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영역에서

대해서는 완전 평등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협동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개인의 복지가 사회 협동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불평등 분배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다. 롤스는 이러한 불평등의 정당화를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결합된 민주주의적 평등(democratic equality)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평등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지닌 대표인들에게 복지와 후생에 대한 기대치를 할당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적 평등은 처지가 나은 사람의 좀 더 높은 기대치는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도록 작용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평등으로 집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주의 사회계약론에 근거하여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롤스가 전망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 생기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국가이다.

롤스의 사회정의론이 ‘자유의 원리’와 ‘평등의 원리’의 대립을 조화시키는 이론으로서 가지는 중요성만큼 이에 대한 비판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먼저 자유지상주의자인 R. 노직(Nozick)은 평등주의(egalitarianism) 입장에서 복지국가 이념을 정당화하는 롤스의 입장을 평등주의가 초래할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판한다(Nozick, 1974). 노직이 롤스를 비판하는 중심 주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산(natural assets)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와

자유로운 처분권을 포함하는 소유권이 정의의 근본 개념이며 분배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직의 비판에 대해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 가족,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자연적 자산의 자의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자연적 자산으로 인한 영향을 극소화시키고 사회적 기본재의 분배를 통해서 교정하려는 것이다.

R. 드워킨(Dworkin)의 비판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윤리원칙에 기초한 정치도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드워킨은 자유주의 정의론은 윤리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롤스는 윤리적 원칙이 아닌 사회계약에 기초를 두고 정의론을 전개한 점을 비판한다(Dworkin, 1978). 드워킨은 ‘평등한 중요성(equal importance)의 원칙’(객관적으로 성공한 삶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는 것)과 ‘특별한 책임(special responsibility)의 원칙’(개인이 선택한 삶의 성공여부는 그 자신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구분하면서 불평등의 기원이 ‘여건’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보상되어야 하나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롤스의 정의론에서 차등의 원칙이 정당화되는 원초적 입장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상정하는 최악의 상황의 원인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롤스는 결과적 불평등에 대한 모든 보상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져 ‘특별한 책임의 원칙’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비판한다. 드워킨은 불평등의 기원에 따른 보상을 정당한 보상으로 규정, 즉 “여건에 둔감하고 개인의 선택에 민감한 분배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이 합당한 평등의 이념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드워킨은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그 대안으로 자원 평등론을 전개한다(Dworkin, 1981).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대안으로서 A. 센(Sen)의 능력 이론은 롤스의 정의의 원칙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 드워킨과 센의 정의론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기로 한다.

제3절 R. 드워킨(Dworkin)의 자원평등론

드워킨은 평등이 정치공동체의 최고 덕목(sovvereign virtue)이라고 간주하면서 평등을 ‘평등한 배려(equal concern)’로 정의한다(Dworkin, 2000). 여기에서 평등한 배려란 사람들이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재산이나 기회의 균등한 분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재산과 권리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드워킨은 평등한 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판명이 나든 간에 “정부는 그것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은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각 개인의 삶에 대해서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어야 한다”(Dworkin, 2000)는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the abstract egalitarian principle)을 정립한다.

드워킨의 정의론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의 갈등 관념을 극복하고 양립 가능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드워킨은 앞에서 서술한 롤스 비판에서 불평등의 기원을 사회적 보상의 근거로 삼고 평등한 배려의 윤리원칙 즉 ‘평등한 중요성’의 원칙과 ‘특별한 책임’의 원칙을 토대로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를 구상하는 것이다.

드워킨은 분배적 평등을 자원과 복지의 두 측면에서 구분한다. 복지평

등론은 정부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복지가 가능한 한 동일하도록 자원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결과적 평등이 강조되고, 자원평등론은 구성원이 갖는 자원의 몫이 가능한 한 동일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수단적 혹은 과정적 평등을 강조한다. 드워킨은 복지평등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원평등론의 입장에서 자신의 평등론을 제시한다. 드워킨의 복지평등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복지평등론은 복지의 차이가 선호나 기호를 충족시키는데 지불되는 비용의 차이인지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인지 그 기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워킨은 자원의 평등한 분배의 척도로서 기회비용 개념과 분배되는 기제로서 경매의 원리 그리고 분배의 평등 기준으로서 선망검사(envy test)를 도입한다. 자원의 가치를 척도하는 기회비용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전 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그가 그것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가치로 정한다”(Dworkin, 2000). 또한 경매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매가 완료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구입한 자원에 대해 선망 또는 시기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경매는 특별한 책임의 원칙을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율적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를 구상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드워킨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의 자원에 대해 선망 또는 시기하지 않을 때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된 상태라고 간주하고 경매 방식에 의한 자원의 분배는 선망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드워킨은 이러한 개념적 장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정의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또 그런 원칙에 따른 분배가 진정한 평등이라고 규정함으

로써 자신의 평등주의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경매와 선망검사를 통한 분배가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선택, 능력, 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능력은 자연적 획득과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획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운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이후의 결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선택에 의한 것과 운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에 의한 결과의 차이인데 드워킨은 운을 선택적 운(option luck)과 눈먼 운(brute luck)으로 구분한다.

드워킨의 자유주의 평등주의에 의하면 선택적 운은 특별한 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택적 운은 예컨대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인데 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지 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드워킨은 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배 결과의 차이들 모두가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눈먼 운에 의한 차이들만이 불평등한 것으로 여긴다.

드워킨은 눈먼 운에 의한 결과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평등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여건에 둔감한 분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가상적 보험’시장을 제시한다. 그는 가상적 보험시장을 조세체제와 연결시켜 문제의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데 이는 롤스의 무지의 베일의 원초적 입장에서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는 최소극대화원리와 유사하다. 비록 능력, 재능, 장애 등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적 변화에 의해 불우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이러한 결과에 대비하여 보험을 구매하는 가상적 보험 시장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험 구매에 평균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하한선을 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계산된 보험료 수준을 조세체제에 적용함으로써 눈먼 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설명된 드워킨의 자원평등론은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드워킨의 자원평등론은 자원의 분배에 있어 평등에 대한 이론으로서 평등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드워킨의 자원평등론이 평등한가라는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드워킨은 선택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선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주의 이론보다는 불평등한 이론이 된다. 그러나 드워킨은 선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주의 이론은 자유주의 정치체제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재산을 동일하게 분배하면서 정당하다고 한다면 재산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동등한 기여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는 배려한 만큼 기여할 수 있는 삶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이 가치 있는 평등이기 위해서는 선택의 권리를 부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른 한편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은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택에 따라 자원의 분배에 차등을 둬으로써 선택과 분배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자원의 차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의 정의관과 유사하다. 그러나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드워킨과는 달리 자연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눈먼 운에서의 차이는 교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드워킨의 자원평등론은 자유지상주의 이론보다 더 평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사실상 선택에 둔감한 분배 원칙으로서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보장된다면 선택에 민감한 분배보다 더 평등적이고 드워킨의 자원평등론이 롤스의 정의론보다 더 평등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최소 수혜자보다 사회적 처지가 나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드워킨은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을 평등하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한다. 드워킨의 정의론의 관점에서는 최소 수혜자보다 사회적 처지가 나은 사람들의 처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면 최소 수혜자들의 약소한 손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워킨의 선택에 민감한 자원분배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한다는 의미에서 불충분한 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드워킨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선택의 범위, 선택의 결과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절 A. 센의 능력이론

센은 롤스의 정의론의 공헌을 인정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의 문제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데 그 핵심 개념이 ‘능력(capability)’이다. 그는 1979년 ‘Equality of What?’(어떠한 측면에서의 평등이 중요한가?)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공리주의적 평등과 롤스의 평등 등 기존의 평등 개념을 비판하고 자신의 능력 중심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제시한다.

센에 의하면 롤스, 노직, 드워킨 등의 정의론은 사회적 가치를 ‘자원’으로 간주하고 그것의 분배를 통해 인생의 목표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센은 사람마다 소유한 자원을 인생의 목표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하는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환하는 능력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Sen, 1984).

센은 자신의 정의론을 전개하기 위한 전제로서 롤스와는 다른 인간 존재의 특성을 지적한다. 롤스는 인간을 '도덕적 능력(moral power)'의 소유자로 간주하고 자신의 이익 또는 후생과는 상반되는 가치판단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센은 인간의 특성을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주체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즉 인간은 행위주체로서 다양한 목표들 가운데 복지에 최고의 비중을 부여할 수도 있으나 또한 다른 목표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센은 인간의 다양성(human diversity)을 무시하고 획일적 분배를 통해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롤스를 포함한 기존의 평등 개념의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센은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간 행동의 연관성을 포함하는 이론을 모색한다.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 주제는 정의로운 제도로써 '사회의 기본 구조'를 구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센은 정의로운 제도가 정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효과성은 바로 그 제도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센은 제도와 실제 행동의 연관성을 포함하는 이론을 통해 정의로운 제도가 실제로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센은 개인의 다양한 행동 또는 선택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유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센은 자유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기회(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수단)이다. 기회(opportunity)로서 자유는 개인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substantive) 자유 또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이 실질적 자유에는 기아, 영양실조, 예방 가능한 질병, 조기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본 능력, 계산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자유, 정치적 참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과정으로(process)서 자유는 선택의 절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

어 행동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행동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정치적 자유, 경제적 능력, 사회적 기회, 투명성 보장, 안전보장 등이 포함된다. 센은 과정으로서의 자유의 중요성을 수용하면서 기회로서의 자유의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룬다(Sen, 1999).

센은 인간을 동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치판단과 행위동기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및 사회적 특성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한 자원(소득, 장점)을 이용해서 복지를 성취할 수 있는 자유 또는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의 다양성은 기회의 균등이 불평등한 소득을 초래하거나 균등한 소득이 불균등한 부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이 센이 평등의 관점을 'Why Equality'(왜 평등이 중요한가?)에서 'Equality of What?'(어떠한 측면에서의 평등이 중요한가?)으로 옮긴 이유이다.

센에게서 인간은 행위동기나 능력 측면에서 다양하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은 '자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의 공간이며 또한 이 공간에서 평등은 기회균등이 아니라 능력 평등의 문제가 될 것이다(Sen, 1992).

이상과 같이 센에게서 자유는 정의의 핵심 요소이고, '자유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그의 정의론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능력'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능력이론의 기본적 개념은 성취수단, 기능(functioning),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성취수단은 목표의 성취에 필요한 자원으로써 재화와 용역의 형태를 띤다. 다양한 방식(정부, 기업, 비영리기관 등)으로 제공될 자원은 어떠한 특성들(characteristics)을 지니는데 개인에 따라 특정한 특성에

대해 선택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 기능은 개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거나 원하는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영양섭취, 건강 유지, 질병과 조기사망의 위험으로부터 회피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 행복한 생활, 자기존중 확보,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보다 복잡한 것을 포함하고 이러한 기능집합으로 구성된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지칭하는 복지(well-being)이다. 능력은 개인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기능집합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즉 능력은 결국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센은 이상의 개념 장치로 자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능력이론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정의론은 개인의 전반적인 이점(overall advantage)이 어떻게 측정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공리주의는 물론이고 롤스와 드워킨의 정의론은 개인의 행복, 소득과 부, 사회적 기초재, 자원을 중심으로 분배의 측정 기준을 삼았다면 능력이론은 자유를 기준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이점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능력은 가치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만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측면 즉 평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센의 능력이론은 사회경제적 평등과 관련하여 롤스의 기회 균등원칙보다 실질적인 평등에 더 접합하며 가상적인 원초적 입장이거나 능력이 동일한 개인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이다. 롤스의 차등원칙에 의하면 사회적 기초재는 분배의 대상으로 목적이지만 수단이기도 하다. 개인들이 이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롤스의 차등원칙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이 롤스의 차등원칙을 비판하는 이유는 차

등원칙이 포괄적인 자유를 제약하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과 관련하여 센에게 중요한 것은 합당한 평등과 합당한 불평등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사회적 권리 평등의 합당성은 (경제적) 분배 불평등의 합당성을 정당화한다. 반대로 분배적 평등의 합당성은 역차별의 합당성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센의 능력이론은 기본적으로 능력의 평등을 지향하지만, 능력의 평등 공간만이 유일하고 그 외의 다양한 평등 공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센은 공리주의에 반대하면서도 그것이 중요시하는 결과주의를 수용한다. 따라서 센은 권리의 평등이 초래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그것으로 인한 개인의 능력 또는 실질적 자유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센은 한 공간에서의 평등이 다른 공간에서의 불평등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요구한다.

또한 센의 능력 개념은 기회균등 개념과 차이가 있다. 기회균등 개념은 특정수단에 대한 균등한 이용가능성, 또는 어떤 특수한 장벽이나 제약조건의 균등한 적용가능성으로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능력 개념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또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의론이 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센의 능력이론은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여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을 보다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센의 능력이론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다시금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이 정립된 사회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센의 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교육 기회의 확대와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제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제3장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현황

제1절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기회

제3절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비 지출 수준

3

우리나라의 기회의 불평등 현황 <<

제1절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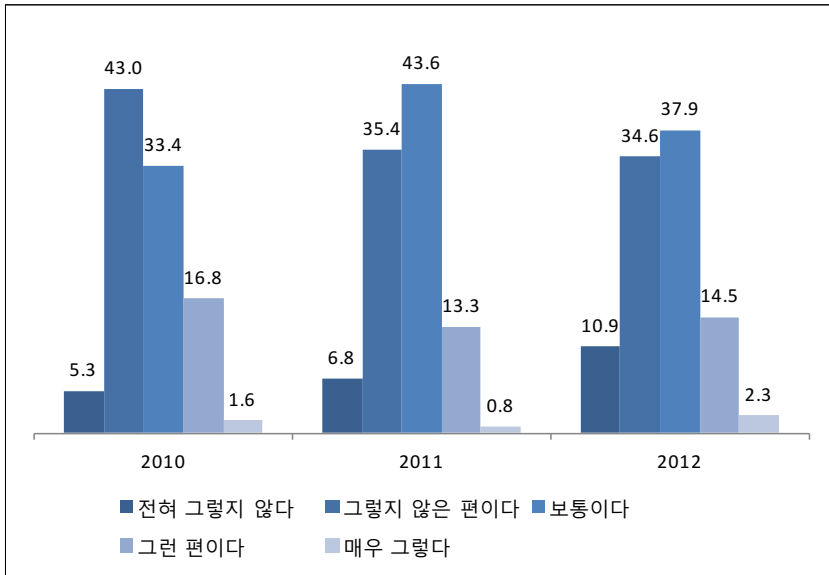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은 사회경제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에 있어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의 할당이나 채용에 있어 직무 수행에 대한 자질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과 그들의 능력형성기에 적절한 자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모든 개인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이다(김우진, 2012).

이러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환경의 차이로 인한 성취의 차이를 정부가 관련 정책을 통해 보정하여야 하는데, 성취의 차이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회의 평등 인식 수준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통합 및 복지 관련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우선 2010년부터 2012년 3개 년도에 걸쳐 실시된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사회통합위원회)’에서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의 보장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2010년에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4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보통이다’(각각 43.6%, 3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2010년 18.4%, 2011년 14.1%, 2012년 16.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각각 48.3%, 42.2%, 45.5%)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우리 사회의 기회균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2011년에는 2010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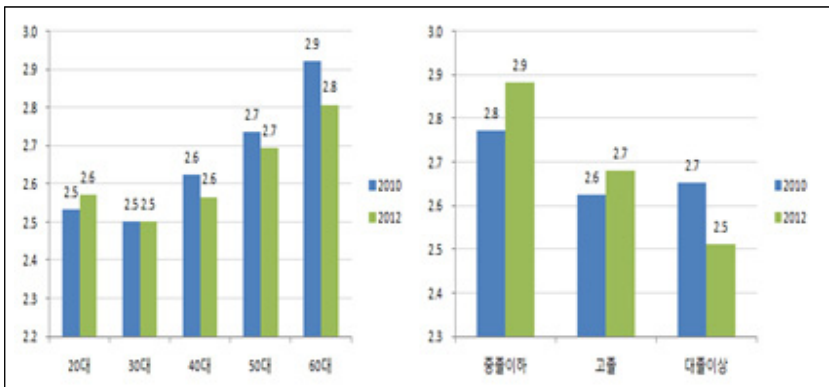


자료: 강신욱(2012). 한국의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연령, 교육수준 등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한다.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연령대별 인식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3-2]의 좌측 그림), 기회균등에 대한 태도가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50대와 60대에서는 크게 나타나는 반면, 20대와 3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이 증가하거나,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인식 수준([그림 3-2]의 우측 그림)의 변화는 초졸과 고졸의 집단에게서 기회균등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대졸이상의 집단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경제사회적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변화



주: 각 막대는 해당 집단별 응답의 평균값임. (1. 전혀그렇지 않다 ~ 5. 매우그렇다)
 자료: 강신욱(2012). 한국의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질문의 응답과 맥을 같이 한다. 같은 조사에서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회균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2012년 각각 22.1%, 28.4%, 25.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 문항 6개⁵⁾ 중 각 년도 2위, 1위,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회균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성공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는데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

5)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에 대한 응답 문항은 경제적 약자배려, 법치주의 정립, 기회균등, 시민의식제고, 관용(차이의 인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사회통합위원회, 2012).

인되었다(Pew Research Center, 2009).

또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에서는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건’을 묻고 있는데, 이는 그 사회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사회인지, 아니면 가족의 배경 등이 지배하는 사회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노력, 즉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야심,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등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향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성공의 조건은 ‘열심히 일하는 것(1.71점)’이지만 ‘사회적 인맥(1.93점)’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맥에 대한 평균 점수가 2.80점이고, 같은 아시아국인 일본이 3.43점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유한 가족의 중요성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족배경과 사회자본을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 성공에 필요한 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프랑스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평균
가족 배경	부유한 부모	3.77	3.45	2.62	3.12	3.52	3.62	3.38
	고학력 부모	2.64	3.29	2.74	2.58	3.22	2.92	2.84
본인 노력	본인 교육수준	2.16	2.73	2.39	2.18	2.31	2.06	2.29
	본인의 야심	2.19	2.63	2.08	2.42	1.93	2.07	2.22
	열심히 일하기	2.39	2.16	1.71	2.14	2.08	1.86	2.10
사회 자본	사회적 인맥	3.21	3.42	1.93	2.47	2.70	2.84	2.80
	정치적 인맥	4.13	3.74	3.14	3.28	3.94	3.95	3.74
부정	뇌물 주기	4.62	4.50	3.95	4.38	4.74	4.71	4.45
귀속 집단	본인의 인종	4.06	4.27	3.89	3.86	3.99	4.07	4.02
	본인의 종교	4.43	4.50	3.81	4.21	4.22	4.23	4.25
	본인의 성별	4.17	4.18	3.72	3.95	3.87	4.18	4.02

주: 스케일은 1(필수적임) ~ 5(전혀 중요하지 않음)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노대명(2011) 재인용.

동일한 조사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인식 정도도 확인할 수 있다. ‘인종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학진학기회가 동등한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는 2.50점으로 평균 2.62점보다 낮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회가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좋은 고등학교 졸업자만 대학을 간다’와 ‘부자라야 대학교 학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교육기회에 인식 정도

구분	프랑스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평균
인종/소득과 무관하게 대학진학기회 동등(B)	2.95	2.23	2.50	2.62	2.36	2.69	2.62
좋은 고등학교 졸업자만 대학을 간다(A)	3.00	3.90	2.71	3.48	3.81	3.33	3.27
부자라야 대학교 학비를 부담할 수 있다(A)	2.58	3.34	2.58	3.64	3.82	3.23	3.05

주: 스케일 A는 1(매우 정당) ~ 5(매우 부당) / 스케일 B는 1(매우 그렇다) ~ 5(전혀 그렇지 않다)
 자료: ISSP(2009), Social Inequality Module 원자료; 노대명(2011) 재인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기회의 충족도에 대한 인식은 그것의 정당성 인식 정도와는 다르게 소득계층별로 충족도에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008~2012년 사회조사(통계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귀하는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의 계층은 교육기회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3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충족되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계층별로 교육기회가 불균등적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소득계층별 교육기회의 충족도 인식

구분	2008		2010		2012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100만원미만	21.5	78.5	26.3	73.7	26.0	74.0
100~200만원미만	33.5	66.5	39.6	60.4	40.0	60.0
200~300만원미만	40.9	59.1	46.3	53.7	49.5	50.5
300~400만원미만	47.9	52.1	52.4	47.6	54.4	45.6
400~500만원미만	54.2	45.8	57.9	42.1	57.7	42.3
500~600만원미만	58.9	41.1	59.7	40.3	62.8	37.2
600만원이상	62.7	37.3	67.3	32.7	68.4	31.6

자료: 사회조사(2008, 2010, 201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기회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있어 교육수준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은 직업적 성취와 그에 따른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는 것이다. 평등한 교육적 기회의 제공은 귀속적 지위인 신분에 기초한 전근대적 계층체제로부터 개인의 능력 및 업적에 기초한 산업사회 계층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인차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반대로 교육기회의 불평등도가 클수록 개인의 지위획득 과정에 미치는 배경의 영향이 직접적이고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방하남·김기헌, 2002). 따라서 교육기회의 분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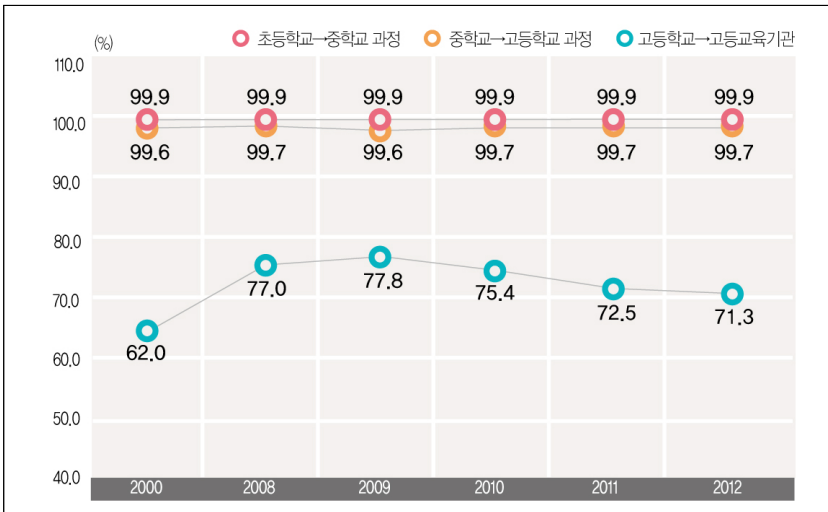
교육기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등교육 기회나 학력 등의 양적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학업성취 정도나 학벌 등의 질적 측면이다.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질적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교육기회가 확대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은 교육의 질적 차별화

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Lucas, 2001).

우선, 양적 측면에서 교육기회는 고등교육 진학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대학진학률, 즉 교육기회의 획득 자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고등교육 기관 진학률은 71.3%로 2009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00년에 비해 약 10%p가 높아진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어 계층 간 교육 기회는 2000년에 비해 균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는 위와 같은 대학진학 여부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여부에 대한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란·박병영, 2009).

[그림 3-3]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



주: 진학률=(진학자수/졸업자수)×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간추린 교육통계

그러나 교육기회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대 대비 4년제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효과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며, 상위권 대학진학으로 한정할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의 영향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문대 보다는 4년제 대학, 또는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방하남·김기현, 2002; 김미란·박병영, 2009; 류방란·김성식, 2006; 변수용·김경근, 2010; 김위정 외, 2013).

방하남·김기현(2002)의 연구에서는 진학한 과의 수능서열분포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능서열분포도 상위범주로 치우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는 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경우, 가구소득이 상위층에 속할 경우가 그렇지 않은 다른 그룹에 비해 자녀가 진학한 대학(과)의 수능서열이 상위(4분위)에 속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 사회계층별 고등교육 진학자의 수능서열 분포

구 분		수능 하위	수능 중위	수능 상위	계
부의 교육	중졸 이하	233 (51.2)	152 (33.4)	70 (15.4)	455 (100%)
	고졸	192 (43.2)	141 (31.8)	111 (25.0)	444 (100%)
	전문대졸 이상	44 (20.4)	75 (34.7)	97 (44.9)	216 (100%)
부(모)의 직업	농림어업	95 (55.2)	52 (30.2)	25 (14.5)	172 (100%)
	기능·생산	50 (48.1)	32 (30.8)	22 (21.2)	104 (100%)
	서비스·판매	117 (47.2)	80 (32.3)	51 (20.6)	248 (100%)
	준전문·사무	97 (38.3)	85 (33.6)	71 (28.1)	253 (100%)
	관리·전문	58 (27.5)	75 (35.5)	78 (37.0)	211 (100%)
가족의 소득계층	하층	101 (47.2)	65 (30.4)	48 (22.4)	214 (100%)
	중층	224 (43.0)	175 (33.6)	122 (23.4)	521 (100%)
	상층	95 (33.0)	92 (31.9)	101 (35.1)	288 (100%)
가족의 사회자본	없음	385 (44.9)	278 (32.4)	195 (22.7)	858 (100%)
	있음	91 (32.5)	96 (34.3)	93 (33.2)	280 (100%)

자료: 방하남·김기현(2002)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주요 배경요인별 일반고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 분석결과(변수용·김경근, 201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여러 변인 중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과의 관계 분석 결과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으로, 4년제 대학 내에서는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5〉 부모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별 일반고 졸업자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 결과

구분	2년제 대학 진학	4년제 대학 진학						X^2
		소계	40위권 밖	31~40위	21~30위	11~20위	1~10위	
전체	23.6	76.4	51.1	7.0	6.8	6.1	5.4	
부모교육수준								122.85***
중학교 졸업 이하	34.7	65.3	51.4	5.1	3.2	1.9	3.7	
고등학교 졸업	26.6	73.4	52.2	6.7	6.2	4.4	3.9	
2년제 대졸	24.1	75.9	47.5	8.6	10.5	6.2	3.1	
4년제 대졸	14.6	85.6	49.3	8.5	7.6	11.7	8.5	
석/박사 졸	3.0	97.1	52.5	5.9	11.9	11.9	14.9	
월평균 가구소득								80.92***
200만원 미만	35.2	64.7	46.7	5.7	6.3	3.0	3.0	
200~300만원 미만	25.8	74.2	53.1	7.6	7.4	3.9	2.2	
300~400만원 미만	20.6	79.4	52.2	6.9	6.7	6.7	6.9	
400만원 이상	16.1	83.7	51.1	7.2	6.8	9.9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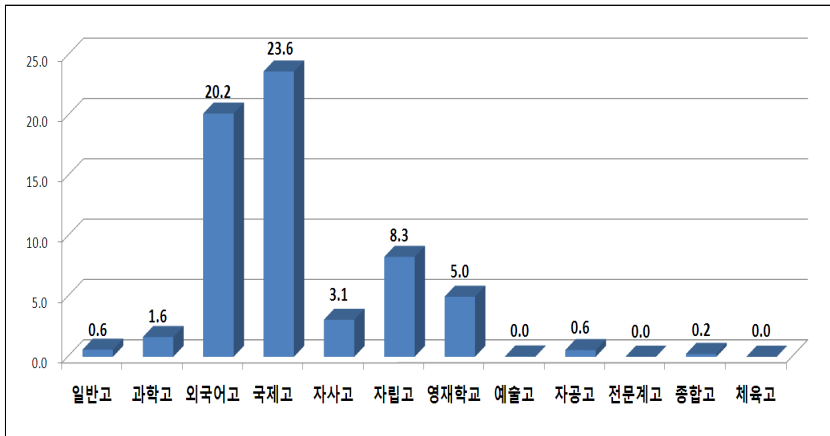
자료: 변수용·김경근(2010)

또한 교육부의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⁶⁾도 같은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응시자 상위 약 1%(6,855명) 학생의 지역, 학교설립유형, 학교유형 등을 살펴보면 상당히 편향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6)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인별 성적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2013.8.19)

전체 학생의 23.5%를 차지하는 서울 출신 응시생들이 상위 1% 응시생의 37.2%를 차지했고, 전체 학생의 5.1%에 불과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 응시생들이 상위 1% 응시생의 11.5%를 차지해 상위 1% 응시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에 드는 학생의 학교유형을 살펴보면, 각 유형별 학교의 전세 수능 응시생 대비 수능 상위 1%의 학생 비중이 국제고 23.6%, 외고 10.2%, 지역단위 선발 자사고 8.3%, 영재학교 5.0%, 자립형사립고 3.1%, 과학고 1.6%, 일반고 0.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에서 상위 1%에 들어갈 확률은 국제고의 1/40에 불과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지역별로는 사교육비 지출이 큰 강남3구 출신 학생이,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등학교보다 학비가 비싼 국제고 및 외고 등의 학생이 성적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소득이 높고 교육비 지출이 큰 학생일수록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4] 학교유형별 전체 수능 응시생 수 대비 상위 1% 응시생 비율



자료: 박홍근 의원실(2013).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인별 성적자료

제3절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비 지출 수준

1. 우리나라 현황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교육비 지출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적 관점에서 부모의 기대 및 지지수준 등으로도 자녀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사교육이 매우 보편화된 한국의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교육비 지출, 특히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교육기회는 양적 차원보다는 질적 차원에서 계층별로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질적 차이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통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부분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수준 비교를 통해 교육기회의 불평등 실태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소득계층은 가구의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주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녀의 사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 비용으로서 비교를 위해 자녀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2012년 현재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254,575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분위 114,275원, 2분위 182,854원, 3분위 246,280원, 4분위 287,443원, 5분위 415,37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분위 가구는 1분위 가구에 비해 약 4배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격차는 2003년~2007년 약4배 수준에서 2008~2009년 약5배로 높아졌다가 2010년 이후 다시 4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분위별 격차는 4분위와 5분위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현격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소득계층별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

(단위: 월/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03	55,965	91,662	120,143	149,132	225,401	129,167
2004	62,434	97,688	139,489	176,124	258,512	146,553
2005	73,000	107,569	144,768	196,991	274,909	162,061
2006	78,795	121,755	172,416	217,975	314,230	184,183
2007	92,636	133,527	187,405	236,551	333,333	197,103
2008	88,232	151,252	195,732	269,586	402,289	223,905
2009	85,298	159,693	206,830	278,783	432,721	236,452
2010	99,410	162,434	220,076	279,969	421,609	239,728
2011	107,379	176,818	233,705	286,088	441,026	253,144
2012	114,275	182,854	246,280	287,443	415,370	254,575

주: 1) 자녀(7세~18세) 1인 이상 가구 대상

2) 균등화된 경상소득 기준으로 분위 구분함

3) 사교육은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 미 포함)을 의미함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가구의 경상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득계층별 지출 격차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먼저 경상소득 대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평균은 5.5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 6.77%, 2분위 6.13%, 3분위 6.05%, 4분위 5.35%, 5분위 4.81%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현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경상소득 대비 지출 비중은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부담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

〈표 3-7〉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03	5.39	4.83	4.77	4.47	4.35	4.60
2004	5.56	4.89	5.13	4.83	4.49	4.83
2005	6.38	5.34	5.08	5.18	4.43	4.99
2006	6.54	5.84	5.61	5.45	4.99	5.43
2007	6.69	5.85	5.91	5.58	4.89	5.50
2008	6.69	6.39	6.12	6.04	5.19	5.85
2009	6.36	6.35	6.10	6.03	5.47	5.91
2010	6.22	6.22	5.93	5.82	5.38	5.78
2011	6.56	6.09	5.95	5.65	5.20	5.69
2012	6.77	6.13	6.05	5.35	4.81	5.53

주: 1) 자녀(7세~18세) 1인 이상 가구 대상

2) 균등화된 경상소득 기준으로 분위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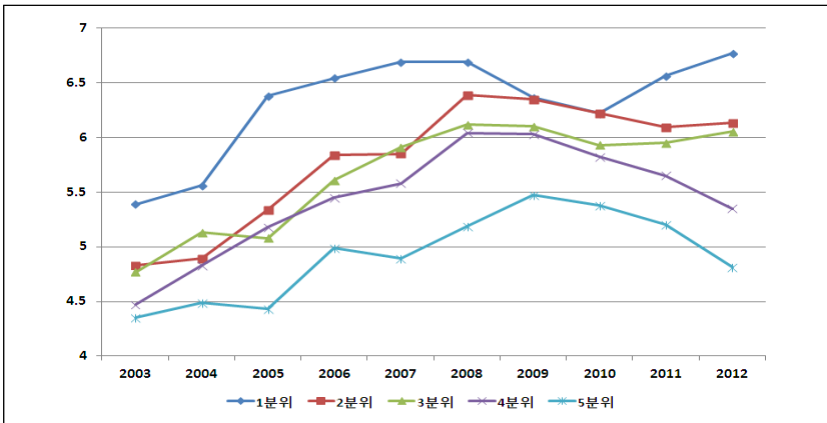
3) 사교육은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 미 포함)을 의미함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3년 이래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2009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1분위 가구는 2010년 사교육비 부담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 소득계층별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에 비추어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 보면 2012년 현재 전체 평균은 8.29%이며,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 6.18%, 2분위 7.69%, 3분위 8.57%, 4분위 8.49%, 5분위 9.17%로 나타나고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저소득층의 경우 절대적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낮지만, 경상소득 대비 비중은 크며, 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낮은 1분위를 비롯한 저소득층 가구의 낮은 사교육비가 의식주 등 필수 소비지출로 인한 예산 제약의 결과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8〉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
2003	5.00	5.83	6.62	6.77	7.81	6.67
2004	4.88	5.91	7.02	7.43	7.94	6.92
2005	5.48	6.39	6.94	7.88	8.05	7.23
2006	5.60	6.84	7.49	8.18	8.95	7.77
2007	5.97	6.99	7.96	8.41	9.03	7.98
2008	5.85	7.58	8.26	9.06	9.86	8.51
2009	5.38	7.75	8.30	9.19	10.04	8.59
2010	5.59	7.55	8.12	8.98	9.85	8.43
2011	5.87	7.41	8.28	8.65	9.80	8.33
2012	6.18	7.69	8.57	8.49	9.17	8.29

주: 1) 자녀(7세~18세) 1인 이상 가구 대상

2) 균등화된 경상소득 기준으로 분위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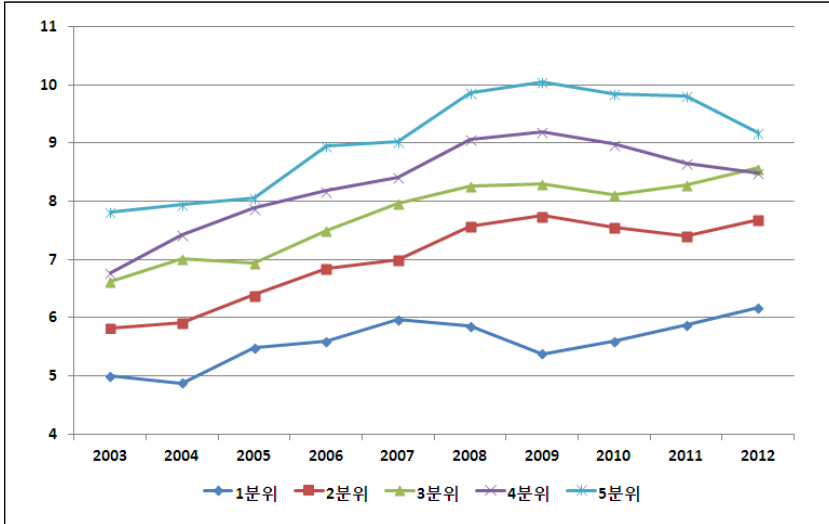
3) 사교육은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 미 포함)을 의미함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3년 이래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5분위는 2009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1~3분위는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지출 대비 지출 비중은 1분위와 2분위 사이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주의 학력별로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2012년 중학교 졸업 이하 가구에서는 98,635원, 고등학교 졸업 가구에서는 200,595원, 전문대 졸업 이상 가구에서는 328,754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인 가구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약3배 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가구보다 약2배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9〉 가구주 학력별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

(단위: 월/원)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졸 이상	평균
2003	67,222	110,815	188,676	129,167
2004	74,717	125,001	214,640	146,553
2005	81,235	140,069	229,648	162,061
2006	78,166	157,778	264,820	184,183
2007	90,688	166,312	278,590	197,103
2008	92,000	173,339	324,376	223,905
2009	102,139	179,363	333,712	236,452
2010	107,052	185,139	327,107	239,728
2011	115,007	195,581	337,304	253,144
2012	98,635	200,595	328,754	254,575

주: 1) 자녀(7세~18세) 1인 이상 가구 대상

2) 사교육은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 미 포함)을 의미함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주 학력별 사교육비 지출을 경상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2012년 중학교 졸업 이하 가구는 3.44%, 고등학교 졸업 가구는 4.97%, 전문대졸 이상 가구에서는 6.21%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0〉 가구주 학력별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졸 이상	평균
2003	3.36	4.37	5.22	4.60
2004	3.45	4.54	5.53	4.83
2005	3.65	4.78	5.54	4.99
2006	3.83	5.19	5.98	5.43
2007	4.03	5.22	6.07	5.50
2008	3.98	5.37	6.59	5.85
2009	3.92	5.39	6.65	5.91
2010	3.55	5.10	6.70	5.78
2011	3.73	5.18	6.36	5.69
2012	3.44	4.97	6.21	5.53

주: 1) 자녀(7세~18세) 1인 이상 가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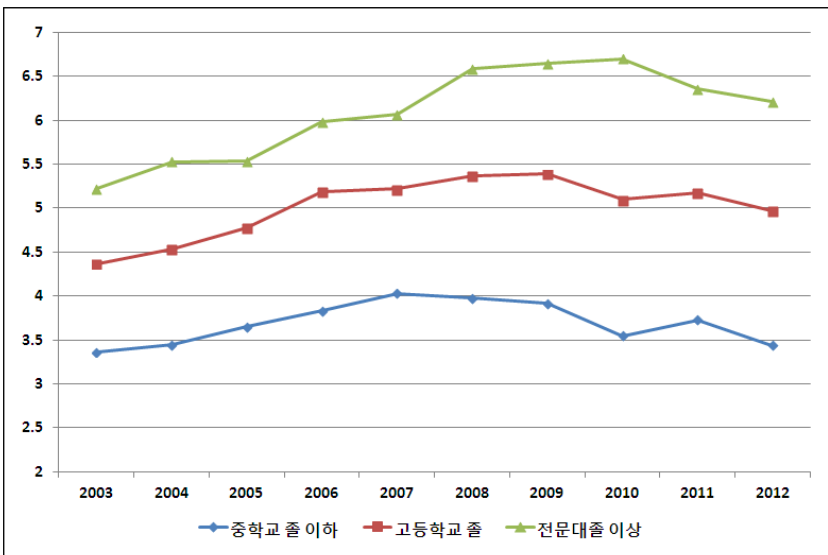
2) 사교육은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 미 포함)을 의미함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연도별로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03년 이래 가구주 학력과 무관하게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중학교 졸업 이하 가구는 2007년, 고등학교 졸업 가구는 2009년, 전문대졸 이상 가구는 2010년 정점을 찍고 다소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7] 가구주 학력별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또한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가구주가 중학교 졸업 이하 가구는 5.49%, 고등학교 졸업 가구는 7.17%, 전문대졸 이상 가구는 9.76%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실태를 정리하면, 가구주의 학력은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모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

출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득계층별 지출 실태와 다른 양상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육비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저학력 가구에서의 낮은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예산 제약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11〉 가구주 학력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중학교 졸 이하	고등학교 졸	전문대졸 이상	평균
2003	4.42	6.17	8.03	6.67
2004	4.40	6.40	8.33	6.92
2005	4.83	6.76	8.44	7.23
2006	4.81	7.13	9.15	7.77
2007	5.41	7.30	9.29	7.98
2008	5.07	7.55	10.18	8.51
2009	5.19	7.41	10.32	8.59
2010	4.65	7.19	10.26	8.43
2011	4.83	7.20	9.96	8.33
2012	4.59	7.17	9.76	8.29

주: 1) 2인 이상 전국가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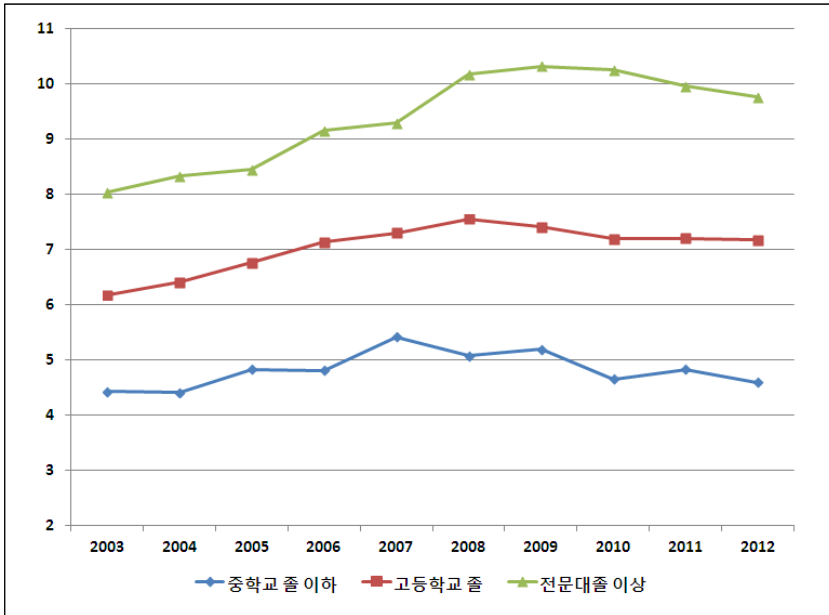
2) 공교육은 7~17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은 학원 및 보습교육(성인 미 포함)을 의미함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아래 그림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및 전문대졸 이상 졸업 가구에서는 대체로 지출 비중의 증감폭이 작은 것에 반해 중학교 졸업 가구에서는 그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저학력 가구에서 교육비 지출이 다른 소비 지출에 비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8] 가구주 학력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

(단위: %)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교육비 지출 수준 국제 비교

그렇다면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가. 이를 살펴보는 것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기회의 한 단면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3)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8.0%)와 아이슬란드(7.7%)에 이어 세 번째로 공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OECD, 2013). 이는 OECD 평균이 6.3%인 것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중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4.8%로 나타나 OECD 평균 5.4%보다 낮은 실정이다. 즉, OECD 국가들 보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공교육비 지출이 높은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민간부담이 채 1%로 되지 않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민간부담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10)

(단위: %)

구 분	전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¹⁾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덴마크	8.0	7.6	0.4	4.8	4.7	0.1	1.9	1.8	0.1
아이슬란드	7.7	7.0	0.7	4.9	4.7	0.2	1.2	1.1	0.1
한 국	7.6	4.8	2.8	4.2	3.4	0.9	2.6	0.7	1.9
OECD 평균	6.3	5.4	0.9	4.0	3.7	0.3	1.7	1.1	0.5

주: 1) 계는 반올림으로 인해 단순 합계(정부부담+민간부담)와 다를 수 있음.

2) 2010년도 GDP는 1,173,274,900백만원임(2009년도 1,065,036,800백만원 대비 10.2%p 상승)

3)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4) '전체 교육단계'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 포함.

5) 정부부담 =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 지원금+민간이전금)/GDP)*100

민간부담 = ((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 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의 민간이전금)/GDP)*100

자료: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전체 공교육비 대비 정부부담 비율은 2010년 61.6%로 나타나 2005년 58.9%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기간 OECD 평균 정부부담 지출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과 비교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 비중은 OECD 평균 지출 비중의 74%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정부 공교육비 부담은 OECD 평균 지출 비중의 40%에 머물고 있다.

〈표 3-13〉 GDP 대비 정부부담/민간부담 공교육비 상대적 비중(200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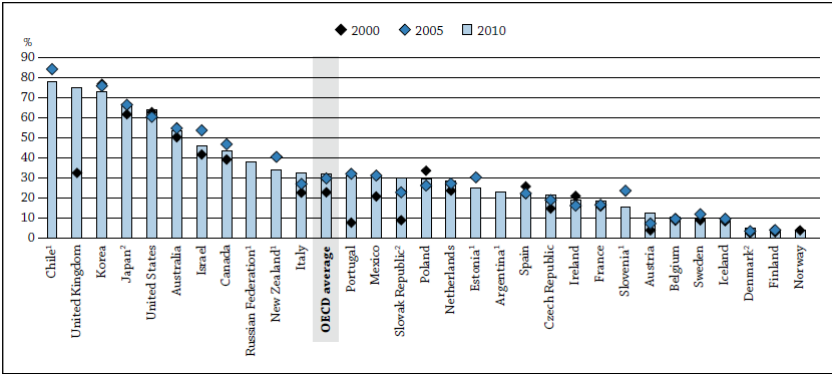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전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05년		'10년		'05년		'10년		'05년		'10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한 국	58.9	41.1	61.6	38.4	77.0	23.0	78.5	21.5	24.3	75.7	27.3	72.7
OECD 평균	85.5	14.5	83.6	16.4	91.5	8.5	91.5	8.5	73.1	26.9	68.4	31.6

자료: 교육부(2013.03.25.).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 비중은 칠레,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림 3-9〕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 비중



자료: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이러한 실정은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교육 23%, 중등교육 28%로 OECD 평균 초등교육 23%, 중등교육 26%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OECD 평균은 41%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5% 수준으로 초·중등교육에 비해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4〉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0)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한 국	6,601	23	8,060	28	9,972	35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주: 1) 2010년도 한국 PPP 환율은 \$1당 823.67원이며, 1인당 GDP는 US\$ 28,829임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학생 수) / PPP
3)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자료: 교육부(2013.03.25.).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제4장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성취

-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이론적 논의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4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성취 << -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흔히들 ‘기회의 평등’ 좀 더 협소하게 ‘교육기회의 평등’은 근대 이후 가장 기본적으로도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고루 받아들여지는 평등의 영역이다. Nozick, Rawls, Sen, Roemer에 이르기까지 평등을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많은 학자들에게 ‘출발선상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전제나 기본가정으로 인식된다. 근대 서구 국가들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급속히 확대되어온 것은 -복지국가에서 흔히 다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복지국가의 연대(solidarity)의 기반으로서 ‘기회의 평등’ 장치의 구현을 목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까지 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일부 유럽대륙 국가들⁷⁾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나드는 한국⁸⁾에서도 오늘날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회의적이다. 왜 그러한가?

철학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여기에서부터 갈라진다. 어떤 이들은 교육기회의 평등-그것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간에-을 부여한 이상 그 다음의 결과는 ‘능력의 차이’로 간주한다. 다른 이들은 오늘날 주어지는

7) OECD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비용 중 민간 부문이 부담하는 비용이 총 GDP의 0.1~0.2%에 불과한 국가들로, 고등교육까지 거의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국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고등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총 비용은 GDP의 1.9%이다(OECD, 2013).

8)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은 71.3%를 기록했다. 단, 2011년부터 진학자의 조사기준이 2월 졸업 당시 대학합격자에서 4월 1일 현재 대학 등록자로 조정되었다(통계청, 2013).

‘교육기회의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라기보다는 형식적 평등에 가깝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 자체가 허구에 불과하다고 논박한다. 즉,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는 기능론적 관점으로 대변되며,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출신배경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세대 간 사회이동을 촉진시켜 능력주의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후자의 비판적·갈등론적 관점에서,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재이다. 즉 교육성취는 순수한 능력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신 계층의 배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이 출신 계층 배경의 영향을 은밀하게 매개한다는 것이다. 최근 후자 쪽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교육평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왕재선·박원수 2006). 특히,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교육기회의 평등은 가정과 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자원 내지 자본’의 차이로 인해 빛이 바랬다고 주장한다. 즉,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주어지는 물질적 자원, 부모와 친지의 학습조력과 각종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원, 문화적 유산과 지적·정서적 자극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자원들은 물질·사회적·문화적 자본으로 화(化)함으로써 학력자본을 형성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부모의 물질적 자원이나 학교 자체의 자본(강남, 특목고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장미혜, 2002; 김정근·변수용, 2007; 남현숙·김혜숙, 2013). 본 연구는 기존의 물질 자원 중심의 불평등 개념 구성을 좀 더 다원화함으로써 복잡한 사회구조와 계층 형성 및 이동 메커니즘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부모가 가진 물질 자본 뿐 아니라 문화자본의 향유 수준이 학생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이론적 논의

부르디외는 개인과 가족의 문화 자원은 경제적 자원(경제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사회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의 형태를 띤다고 주장한다(Jaeger, 2011). 부르디외가 말하는 문화자본의 개념은 모호하고 때로 상이한 방식으로 서술되지만, 대체로 체화된 상태, 객체화된 상태, 제도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문화에 새겨진 개념적, 규범적 코드를 지칭한다. 체화된 상태란 상당 시간 동안의 주입(inculcation)과 동화(assimilation)를 통해 문화자본이 내재적으로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객체화된 문화자본이란 문화적 상품(그림, 책, 사진, 도구, 기계)의 형태의 전유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된 상태는 학교 졸업장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문화자본의 형태를 띤다. 부르디외는 문화적 욕구가 양육과 교육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모든 문화적 실천(박물관 관람, 음악회 참가, 독서 등), 문학, 회화, 음악에 대한 선호도는 교육수준, 그리고 이차적으로 출신계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취향은 ‘계급’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부르디외, 2006:21).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집에서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 학교에서의 자녀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자원이 문화자본으로 전환된다(김

현주이병훈 2007 재인용). 부르디외의 이러한 주장은 문화재생산모형(cultural reproduction model)으로 정형화된다. 문화재생산이론에 따르면, 계급재생산이 세대 간 문화자본의 전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학교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Bourdieu, 1997; DiMaggio, 1982; De Graaf, 1988).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지배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학교문화에 친숙한 언어적, 문화적 성향을 입학 전부터 문화자본의 형태로 습득한다(Bourdieu 1997). 그들이 습득한 문화자본은 교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데, 교사들도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된다. 그 결과 이들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고 나아가 보다 나은 학업성취와 교육성취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적, 문화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는다(Lareau, 1987). 이에 따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바라는 학업성취나 교육성취를 얻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분배는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Bourdieu, 1997; 김경근변수용, 2007 재인용).

구체적으로, 문화자본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교육성과를 증진시킨다(Bourdieu 1997, 1984; Bourdieu and Passeron; Jæger, 2011 재인용). 첫째, 아동은 부모의 문화자본에 소극적으로 노출되거나 문화자본을 아동에게 이전하려는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부모로부터 문화자본을 상속받는다. 이러한 문화자본은 아동의 지식, 언어, 매너 등에 체화된다. 부르디외가 말하는 '아비투스'(haitus)가 바로 이러한 형태의 문화자본이다. 둘째, 교육체계는 문화자본을 인지하고 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구조적 매카니즘은 교사가 아동의 높은 수준의 문

화자본을 학문적 영특함의 표식으로 체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자본에 대한 보상은 “학문적 영특함”의 아우라와 같이 상징적일 뿐 아니라, 교사와 동료들로부터의 우대와 더 많은 관심으로 인해 더 나은 학문적 성취로 구체화된다.

2. 국내외 기존 연구

부르디외의 문화재생산이론은 해외에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Cheadle, 2008; Crook, 1997; De Graaf, de Graaf and Kraaykamp, 2000; DiMaggio and Mohr, 1985; Dumis, 2002; Farkas et al., 1990; kalmijn and Kraaykamp, 1996; Katsillis and Robinson, 1990; Robinson and Garnier, 1985; Roscigno and Ainsworth-Darnell, 1999; Sullivan, 2001; van de Werfhorst and Hofstede, 2007; Jæger, 2011 재인용). 아래 표는 문화자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외의 실증 연구들을 재거(Jæger, 2011)가 정리한 것이다.

〈표 4-1〉 문화자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해외 연구

연구	문화자본 측정치의 영향	문화자본 측정치	나라
Outcome: Academic Achievement (GPA/Test Scores)			
DiMaggio (1982)	+m/+w [Overall GPA, English, History, and Math Grades]	H	미국
Katsillis and Robinson (1990)	NS [Overall GPA, Language, Math, Science, and History Grades]	H	그리스
Downey (1995)	+/+/+	E/H/H	미국

84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연구	문화자본 측정치의 영향	문화자본 측정치	나라
Roscigno and Ainsworth-Darnell (1999)	+/+/+ [MRCT] +/+/+ [Overall GPA]	H/H/E H/H/E	미국
Sullivan (2001)	NS/+	H/H	영국
Dumais (2002)	NSm/+w	H	미국
Eitle and Eitle (2002)	+/NS/+ [MRCT] NS/NS/NS [Overall GPA]	H/H/E H/H/E	미국
Van de Werfhorst and Hofstede (2007)	+	H	네덜란드
Cheadle (2008)	+/+	H/C	미국
Jæger (2009)	+/NS/+/-	H/E/C/C	덴마크
Covay and Carbonaro (2010)	+	X	영국
Flere et al. (2010)	+	H	슬로베니아
Outcome: Educational Attainment			
DiMaggio and Mohr (1985)	+m/+w	H	미국
De Graaf (1986)	+/-age<40 +/+age>40	R/H R/H	네덜란드
Teachman (1987)	+m /+w	E	미국
Graetz (1988)	+ch1/+ch2/+ch3	H	호주
Kalmijn and Kraaykamp (1996)	+	H	미국
Aschaffenburg and Maas (1997)	+/+	H/H	미국
De Graaf et al. (2000)	+/NS/+	H/H/R	네덜란드
Georg (2004)	+	(H, R)	독일
Kaufman and Gabler (2004)	+	X	미국
Jæger and Holm (2007)	+	R	덴마크

주: 1) +: 문화자본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 ($p < .05$), -: 문화자본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 ($p < .05$ or better), NS: 문화자본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효과 없음. ; m: 남자, w: 여자, ; age<40: 40세 미만 응답자, age>40: 41세 이상 응답자; ch1: 1949년 이전 출생자, ch2: 1950-69년 출생자, ch3: 1970년 이후 출생자.

2) 문화자본 측정치의 유형: H = 교양문화, E = 교육자원, C = 문화 교류, X = 과외활동, R = 독서행위/습관. MRCT = Math-reading composite test score, GPA = Grade Point Average.

자료: Jæger(2011).

대표적인 연구로 디마지오(DiMaggio, 1982)는 아버지 학력과 학생의 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학생의 문화자본(고급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문화자본은 영어, 역사, 사회,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수학 과목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문화자본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 출신에게 더욱 두드러진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 출신에게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후속연구(DiMaggio and Mohr 1995)에서는 문화자본이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과 졸업, 배우자 선택(배우자의 교육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김경근변수용 2007 재인용). 이와 같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들(Downey, 1995; Roscigno and Ainsworth-Darnell, 1999; Eitle and Eitle, 2002) 뿐 아니라, 영국(Sullivan, 2001; Covay and Carbonaro, 2010), 네덜란드(De Graaf, 1986; Van de Werfhorst and Hofstede, 2007), 덴마크(Jæger and Holm, 2007; Jæger, 2009) 등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자본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실증연구들의 공통적인 명제는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문화자본의 양과 형태를 결정하며, 둘째,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문화자본은 자녀의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셋째, 문화자본 변수를 도입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장상수 2008).

문화자본이 교육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들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손준종(1991)은 부르디외의 주요 이론적 개념과 교육관을 그의 교육적 개념 - 교육적 행위, 교육적 권위, 교육적 일과 교

육제도 -에 대한 해석을 곁들여 소개하며, 이러한 그의 교육론이 우리나라의 ‘학력병’이나 ‘과잉학력’ 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남현숙·김혜숙 2013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문화자본을 최초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장미혜(2002)는 2001년 인문대 및 사회과학대 재학 중인 학생 775명을 대상으로 문화자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적 취향과 인지적 능력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문화자본 모두 학생의 수능성적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15-20%가 문화자본의 효과로, 외국에 비해 부모의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교육고용패널과 한국교육종단패널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변수들을 갖춘 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아동의 교육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이 급증하였다. 이 중 김정근·변수용(2007)의 연구는 한국 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르디외와 디마지오의 모형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문화재생산이론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회계층과 문화자본의 관계, 그리고 문화자본의 세대 간 이전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 자녀의 문화자본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다층모형을 통해 각 수준 변수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이 그들의 문화자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그들의 문화자본을 통해 자녀의 문화자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단, 자녀의 문화자본을 문화활동과 독서향유로 구분하였을 때, 부모의 문화자본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수, 특히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독립적으로 또는 가족배경을 맥락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현주·이병훈(2007)의 연구에서는 교급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자료를 활용한 분석의 결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컸다. 또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가족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동시에 존재하나 여학생의 경우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수(2008)는 OECD의 2000년 수집한 국제학업성취도(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자본이 학생의 성적(한국어 읽기소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디마지오의 가설을 한국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다소 달라서, 문화자본 변수를 투입해도 가족배경의 효과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자본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적 사이에 연관성을 매개한다는 가설은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문화자본이 풍부한 부모의 자녀가 고급문화를 더 많이 소비하지만, 이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국에서 고급의 문화적 활동이 문화자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 즉 상층계급 자녀가 이 자원에 기대어 하층계급의 자녀보다 더 높은 성적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자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의 결과는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느냐, 문화자본을 어떠한 변수로 조작화하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

자본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문화자본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주로 체화된 문화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자본의 조작적 정의로 장미혜(2002)는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음악회나 화랑에 즐겨 가시는 편이다’ 등 14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요인분석한 후 얻어진 요인점수를 부모의 문화자본 변수로 활용하였다. 김경근·변수용(2007)은 학생의 문화자본을 ‘미술관, 박물관에 간다’, ‘고전 음악회, 오페라 공연에 간다’ 등 8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후 얻어진 요인점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장상수(2008)는 부모의 문화자본을 문화적 소유, 가정의 교육자원, 문화적 소통, 가족의 교육지원 등으로 조작화 하였으며, 응답자의 문화자본은 고급의 심미적 문화활동에 참여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김현주·이병훈은 가구 문화생활비의 로그값을 문화자본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역시 연구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김경근·변수용(2007)의 연구에서는 국영수 학업성취도를, 김현주·이병훈(2007)은 성적석차의 퍼센트를 종속변수를 사용하고 있다면, 장미혜(2002)는 수능시험 성적을, 장상수(2008)는 2000년에 수집된 국제학업성취도(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에서 국어 읽기소양점수를 학업성취도의 대리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의 연구들에 비해 후자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점수들이 전체 대상학생들의 점수 표준화에 좀 더 유리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계량적 분석방법상 대부분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 혹은 다수준 분석을 통해 문화자본의 영향력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어떠한 변수를 투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관련 연구들 중 상당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해 왔으나, 김경근·변수용(2007)의 연구에서는 다층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 혹은 통제변수로 학교변수를 투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

〈표 4-2〉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비교

구분	장미혜 (2002)	김경근·변수용 (2007)	김현주·이병훈 (2007)	장상수 (2008)
원자료	자체조사	교육종단패널	교육고용패널	PISA
대상	대학재학생	중학생(1학년)	중고생(1학년)	고등학생(1학년)
종속변수	수능시험 성적	국영수 학업성취도	성적석차퍼센트	한국어읽기소양
독립변수 (문화자본)	(부모) 예술적취향(10문항) 인지적능력(4문항)	(본인) 문화활동(4문항) 독서향유(4문항)	(가구) 문화생활비	(부모) 문화소유물 교육자원 문화적소통 가족의학습조력 (본인) 문화활동참여
독립변수조작	요인점수	요인점수	로그값	웜(Warm)추정치 지수
분석방법	회귀분석	다층분석	회귀분석	회귀분석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학력자본 형성 구조 및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여러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문화자본이 교육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부른 예단이 어렵다는 것이다(김경근·변수용 2007). 문화자본에 대한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교육과정에서 철학적·예술적 소양을 중시하는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문화자본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기술적(technical) 능력을 중시하는 영미계통의 나라에서 문화자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더해 주입식의 표준화된 교육과 평가체계를 가진 나라에 속한다는 점에서 보면, 문화자본이 교육에 미치는 직접적 역할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입시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적어도 학생 수준에서는 계층과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교육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역할을 선불리 판단하게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원자료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조사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본과 관련된 가구 변수들을 담고 있는 4차년도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은 1차년도에 중학교 3학년이고, 4차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이다. 특히, 4차년도에는 전문계고, 외국어고, 과학고 학생들이 표본에 추가됨으로써 대표성이 높아졌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생의 학력고사 수능점수를 담고 있어 학업성취도에 대한 표준화된 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속변수는 학업성취도의 대리변수로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의 수능점수와 합산점수이다. 각각의 수능점수는 9등급체계로 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9등급체계를 수능점수 표준화 방식⁹⁾으로 재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합산점수 역시 표준화¹⁰⁾하여 사용하였다.

9) 표준점수 산출 방식은 언어, 수리, 외국어의 경우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20, 탐구영역의 경우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 바꾸는 것이다. 합산점수 역시 이들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로 환산하였다.

10) 표준점수로 산출할 경우 개인 내 혹은 개인 간 점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z점수는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정한 표준점수이며, z점수를 변화하여 만든 또 다른 표준화 점수로 t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표준점수이다. t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 및 4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자본이 학생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문화자본은 문화활동, 독서환경, 독서향유, 문화생활 수준의 네 가지 개념을 조작화하였다. 첫째, 문화활동은 가족단위의 문화활동 점수로 산정되며, 5점 서열척도로 구성된 5개 항목(외식하기, 영화·연구·뮤지컬 등 관람, 박물관·미술관·음악회 등 관람, 여행·등산·낚시 등, 운동)과 지난 3년간 가족과의 해외여행 여부를 표준화한 점수의 합산점수¹¹⁾로 조작화되었다¹²⁾. 둘째, 독서환경은 학생의 독서향유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정의되며, 취학 전 책을 자주 읽어주었는지(5점 척도)와 가구의 책 보유량(8점 서열척도)을 표준화하여 합산점수로 산정되었다. 셋째, 독서향유는 문화자본이 내재화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한 달 평균 몇 권의 책을 읽는지(등간척도)와 3개의 5점척도 문항(독서는 꼭 해야 할 경우에만 한다. 나는 책읽기를 좋아한다. 책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쁘다)의 표준화 합산점수로 계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수준은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단위 문화지출비의 자연로그로 계측되었다.

수는 대부분이 20-8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므로 모든 점수가 양수로 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 11) 비슷한 연구에서는 주로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점수를 사용함으로써 포함된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요인과 그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의 관계가 이론적으로나 기존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요인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인 차원에서 각 문항이 가구의 문화자본으로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표준화점수를 사용하였다.
- 12) 이 문항은 가구단위 변수와 학생 개인단위 변수 두 개로 조작화되었다. 다만 학생 개인단위 변수에는 해외여행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표 4-3〉 문화자본 변수의 조직화

개념	변수	문항	척도수준
가구단위 문화활동 (가구설문)	가족단위 문화활동점수	귀댁은 가족과 함께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1) 외식하기 2)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관람 3)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관람 4) 여행, 등산, 낚시 등 5) 운동	서열척도 (5점)
		지난 3년간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명목척도
본인참여 문화활동 (학생설문)	학생의 문화활동점수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함께 다음 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1) 외식하기 2)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관람 3)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관람 4) 여행, 등산, 낚시 등 5) 운동	서열척도 (5점)
		고등학교 재학 중 해외여행(어학연수 제외)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명목척도
독서환경	가구의 독서향유 환경점수	학생이 취학하기 전에 책을 자주 읽어 주었습니까?	서열척도 (5점)
		귀댁은 책을 대략 몇 권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서열척도 (8점)
독서향유	본인의 독서향유 활동점수	한 달 평균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등간척도
		독서는 꼭 해야 할 경우에만 한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책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쁘다.	서열척도 (5점)
문화생활 수준	문화생활비	지난 1년간 문화생활 관련 귀댁이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척도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 남성 보호자의 학력¹³⁾, 여성 보호자의 경제활동참여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과 자산 수준¹⁴⁾을 활용하였다. 해당 가구원에 대한 월평균 사교육비, 학생의 성별도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13) 남성보호자가 없는 경우 여성보호자의 해당 변수로 대체하였다.

14) 가구 자산 수준은 무응답자가 많아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이론과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디마지오의 기본 가설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디마지오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문화자본의 양과 형태를 결정한다.
 둘째, 다른 조건을 통제된 상태에서 문화자본은 자녀의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문화자본 변수를 도입하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효과는 크게 감소한다

제4절 분석 결과

1. 부모¹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문화자본의 양과 형태를 결정하는가?

아래 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양친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38.3%와 어머니의 17%는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약 절반 정도는 상용직 근로자였으며, 고용주나 자영자인 경우도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45.1%는 전업주부였다. 조사 대상 가구 중 17.2%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구였으며, 68.5%는 2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였다.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도 14.0%에 이르렀다.

15) 설문에서는 '남성보호자'와 '여성보호자'로 되어 있지만, 대다수가 부모일 것으로 추정되어 본문에서는 편의상 부모로 칭하고자 한다.

〈표 4-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포

구분	부	모
학력		
중졸이하	9.9	15.3
고등학교	51.8	67.7
2년제대	6.7	2.6
4년제대	27.5	12.0
대학원이상	4.1	2.4
계	100.0	100.0
경제활동		
상용직	49.4	28.9
임시일용직	3.8	11.9
고용주	16.9	3.4
자영자	25.5	10.7
실업자 혹은 비경활	4.4	45.1
계	100.0	100.0
가구소득		
0-199만원	17.2	
200-399만원	43.4	
400-599만원	25.4	
600만원이상	14.0	
계	100.0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문화자본을 두 가지 측면, 즉 독서향유와 문화활동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독서향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의 학력별·경제활동 형태별, 가구소득구간별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학력을 제외한 경제활동 형태나 가구소득은 학생의 독서향유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의 유의도도 0.5 수준에서만 유의미했다. Scheffe 사후검증¹⁶⁾ 결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학생만이 유의미하게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독서향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분산분석의 사후검증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Tukey, Duncan, Scheffe Test 중 Tukey와 Duncan은 주로 집단의 수가 같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Scheffe는 집단의 수가 다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표 4-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독서향유점수

구분	부	모
학력		
중졸이하	48.8	49.0
고등학교	49.4	49.3
2년제대	49.4	52.8
4년제대	49.3	50.1
대학원이상	54.2	53.5
계	49.5	49.5
F값(Prob>F)	3.12(0.0144)	2.54(0.0386)
경제활동		
상용직	49.6	49.3
임시일용직	47.8	49.7
고용주	49.8	48.7
자영자	48.7	49.7
실업자 혹은 비경활	50.1	49.3
계	49.4	49.4
F값(Prob>F)	1.01(0.4034)	0.14(0.9659)
가구소득		
0-199만원	48.4	
200-399만원	49.9	
400-599만원	48.7	
600만원이상	50.1	
계	49.4	
F값(Prob>F)	2.11(0.0966)	

실제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는 54.2점의 독서향유점수를 보여 다른 집단과 5점 내외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타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독서향유 점수는 1점 내외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학생은 조사대상의 4.1%로 극소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학생의 독서향유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과 경제활동참여 유형 모두 학생의 독서향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원 이상의 학력의 아버지를 둔 학생을 제

외하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의 독서향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생의 문화활동점수

구분	부	모
학력		
중졸이하	46.2	47.1
고등학교	49.6	49.9
2년제대	48.3	52.2
4년제대	51.7	53.2
대학원이상	53.6	51.1
계	49.8	50.0
F값(Prob>F)	11.04(0.000)	9.19(0.000)
경제활동		
상용직	49.9	49.9
임시일용직	47.9	46.7
고용주	50.8	52.5
자영자	49.8	50.7
실업자 혹은 비경활	45.9	50.3
계	49.7	49.9
F값(Prob>F)	3.89(0.0038)	5.05(0.0005)
가구소득		
0-199만원	47.3	
200-399만원	50.0	
400-599만원	50.4	
600만원이상	50.7	
계	49.7	
F값(Prob>F)	6.21(0.000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독서향유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력, 경제활동유형, 그리고 가구소득 집단별 학생의 문화활동 점수를 산출하고,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서향유와는 달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모두 학생의 문화활동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학생의 문화활동점수는 그 이상의 학력(2년제대 제외)을 가진 아버지를 둔 학생의 문화활동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학생의 문화활동 점수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가진 어머니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 간의 자녀의 문화활동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경제활동 지위 또한 학생의 문화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이는 주로 상용직 혹은 자영자와 실업자 혹은 비경향 아버지 간의 차이로 확인되었다. 임시일용직과 나머지 경제활동 지위에 있는 어머니 간에 자녀의 문화활동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학생의 문화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200만원 미만 소득을 가진 가구와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 사이의 차이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각각 학생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앞서 분산분석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 중 어떤 변수도 학생의 독서향유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생의 문화활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는 주로 학력변수로 나타났다. 즉, 대체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화활동 수준이 더 높았다. 반면, 앞서 분산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가구소득의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학생의 문화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의 문화자본 수준이 학생의 문화자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형 III과 모형 IV에서 가구의 독서환경과 가구의 문화활동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가구의 독서환경과 문화향유 변수는 모두 학생의 독서향유와 문화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 I 독서향유	모형 II 문화활동	모형 III 독서향유	모형 IV 문화활동
부의 교육수준(중졸=0)				
고졸	0.01	2.58*	-0.76	1.92
2년제대	-0.08	0.34	-1.03	-0.18
4년제대	-0.31	3.51*	-1.55	1.72
대학원이상	3.69	5.78**	3.32	1.26
모의 교육수준				
고졸	-0.45	0.76	-0.48	0.2
2년제대	4.25	4.25*	4.23	4.91*
4년제대	0.62	3.34*	-0.52	2.73
대학원이상	2.05	0.11	0	3.94
부의 경제활동(상용직=0)				
임시일용직	-1.66	0.54	-0.22	0.91
고용주	-0.20	1.07	-1.14	0.47
자영자	-0.58	0.34	-0.5	1.1
실업자/비경활	-1.08	-2.53	-0.54	-1.16
모의 경제활동				
임시일용직	0.65	-2.53*	1.42	-2.13*
고용주	-1.86	2.35	0.18	0.83
자영자	0.72	1.86	0.89	1.78
실업자/비경활	0.36	0.52	1.17	0.1
가구소득(0-199만원=0)				
200-399만원	0.75	1.20	1.29	0.21
400-599만원	-0.57	0.99	-0.11	-0.18
600만원이상	0.37	-0.63	1.7	-2.71*
가구의 독서환경			0.15***	0.10**
가구의 문화활동			-0.01	0.40***
Constant	49.24***	45.40***	42.82***	22.51***
N	1,088	1,086	924	923
r2	0.02	0.07	0.04	0.24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의 독서향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반면, 어릴 때 부모가 종종 책을 읽어주었거나, 집에 책의 보유량이 많은 학생은 독서향유 수준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선 김경근(2007)의 연구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로서 주목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독서향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경근(2007)의 연구 결과에서의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 모두 자녀의 독서향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무엇보다도 교급의 차이로 설명될 여지가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입시에 절대적인 시간을 투입할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상적인 독서향유나 문화 활동에 투입할 절대적·상대적 시간을 크게 줄일 시기인 반면, 김경근(2007)의 분석 대상은 중학생으로 상대적으로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교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문화자본은 교육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으로 학생의 문화자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자본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학생의 수능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8〉 변수들의 상관관계

구분	언어	수학	외국어	탐구	수능점수	독서환경	가구문화활동	독서향유	본인문화활동	소득	사교육
언어	1										
수학	0.6068*	1									
외국어	0.7960*	0.6484*	1								
탐구	0.5765*	0.5178*	0.5389*	1							
수능점수	0.8915*	0.8412*	0.9007*	0.7179*	1						
독서환경	0.2137*	0.1536*	0.2380*	0.1713*	0.2313*	1					
가구문화활동	-0.0474	0.0309	0.0025	0.009	0.0066	0.1849*	1				
독서향유	0.1907*	0.0269	0.1094*	0.1354*	0.1404*	0.1561*	-0.0054	1			
본인문화활동	-0.0533	0.009	0.0015	-0.0011	-0.0244	0.2024*	0.4328*	0.0213	1		
소득	0.1895*	0.2080*	0.2476*	0.1078*	0.2430*	0.3356*	0.2170*	-0.0076	0.1393*	1	
사교육	0.1105*	0.1491*	0.2172*	0.0966*	0.1813*	0.2879*	0.1566*	-0.0267	0.1470*	0.4528*	1

단순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구의 독서환경과 학생의 독서향유는 수능 점수와 약한 상관관계(각각 0.23, 0.14)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의 문화활동과 본인의 문화활동은 수능점수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가구소득(0.24)와 사교육(0.18) 역시 수능점수와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형 I에서 학생의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수능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수능점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수능점수는 체계적으로 높아졌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통제하고서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능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학생의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부의교육수준				
고졸이하	2.06*		2.28*	2.14*
전문대졸이하	4.67***		4.49***	4.75***
대졸이하	5.66***		5.85***	5.81***
대학원이상	6.87***		6.40**	7.07***
모의취업여부	0.310		0.64	0.27
가구소득	2.52***		2.15***	2.85***
사교육비	0.230		0.26	0.26
성별(여=0)	-2.77***	-1.57**	-1.95***	-2.78***
독서환경		0.18***	0.06	
독서향유		0.10***	0.13***	
문화활동		-0.07**	-0.07*	
문화활동비		0.54**		-0.34
Constant	31.78***	38.57***	26.97***	30.37***
N	913	1016	786	913
r ²	0.17	0.09	0.2	0.17

아버지 학력과 소득을 통제할 때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나 사교육비는 수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기 전 학생의 성적이나 지능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교육비가 학생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형 II에서는 가구와 학생의 문화자본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문화자본은 수능점수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독서환경과 학생의 독서향유, 그리고 가구의 문화활동비는 학생의 수능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학생의 문화활동은 수능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미혜(2002), 김현주·이병훈(2007), 김경근(2007), 장상수(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연구 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닌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생의 문화활동이나 가족의 문화활동은 학생의 교육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모형 III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화자본변수를 함께 투입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모형 I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장미혜(2002), 장상수(2008)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부의 교육수준 변수에서 B값은 문화자본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경우에도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구소득의 B값은 2.52에서 2.15로 14.7% $(=(2.52-2.15)/2.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학생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효과 중 14.7% 정도는 문화자본의 효과임을 보여준다. 문화자본 변수들 중 독서환경은 사회경제적 변수와 함께 투입했을 때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독서향유는 여전히 수능성적을 높

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활동 또한 수능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 IV에서는 문화자본의 대체변수로 문화활동비를 투입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에서 가구의 문화활동비는 수능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9〉의 각 모형에서 모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수능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자본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능점수 모두(모형 I 과 모형 III)에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모형들과 마찬가지로 모의 취업 여부와 사교육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능점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10〉 학생 성별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결과)

구분 변수	남학생		여학생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부의교육수준				
고졸이하	2.37	2.96*	1.82	1.79
전문대졸이하	3.96*	4.57**	6.09**	4.81*
대졸이하	5.61***	6.15***	5.72***	5.51***
대학원이상	6.74**	5.43	6.98***	6.56**
모의취업여부	0.63	1.34	0.04	0.14
가구소득	2.75**	1.84*	2.26**	2.38**
사교육비	0.19	0.25	0.30	0.27
가구의독서환경		0.07		0.06
본인의독서향유		0.10*		0.15***
문화활동		-0.07		-0.07
Constant	27.54***	27.47***	33.31***	25.22***
N	405	335	508	451
r ²	0.14	0.16	0.15	0.21

문화자본변수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두드러진 점은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증가한 반면 가구소득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문화자본 변수들 중 본인의 독서향유만이 수능성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설명력(R-square)도 0.14에서 0.16으로 0.02p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문화자본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모두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독서향유가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남학생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 또한 0.15에서 0.21로 0.06P 증가하여 문화자본이 수능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자본이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와 같은 수능 영역별 점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분석 결과, 문화자본 중 특히 독서환경과 독서향유는 수리영역을 제외하고는 학생의 수능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수능점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탐구 영역의 수능점수에는 대학 이상의 아버지를 둔 경우에만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독서환경과 본인의 독서향유는 특히 언어영역의 수능점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비해, 문화활동은 수능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리영역에서는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어의 경우도 언어와 마찬가지로 독서환경과 독서향유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독서향유의 영향력은 언어영역에 못 미쳤다.

〈표 4-11〉 영역별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회귀분석 결과)

변수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총점
부의교육수준					
고졸이하	5.52**	3.94	4.40*	0.87	2.28*
전문대졸이하	8.64**	8.90**	8.77**	2.98	4.49***
대졸이하	9.10***	11.44***	9.89***	3.10*	5.85***
대학원이상	10.76**	9.65*	14.92***	5.44*	6.40**
모의취업여부	1.14	0.82	1.04	1.16	0.64
가구소득	3.63**	4.04**	3.60**	0.65	2.15***
사교육비	0.1	0.35	0.79*	0.1	0.26
성별	-3.45**	-2.80*	-2.26*	-0.83	-1.95***
독서환경	0.21**	0.04	0.21**	0.08*	0.06
독서향유	0.33***	0.08	0.17**	0.12***	0.13***
문화활동	-0.17**	-0.06	-0.1	0	-0.07*
Constant	54.51***	66.83***	56.21***	32.26***	26.97***
N	847	800	840	837	786
r2	0.16	0.11	0.17	0.08	0.2

탐구영역에서는 독서환경과 독서향유 모두 수능점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활동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문화자본 중 특히 독서향유는 관련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의 수능점수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문화활동의 경우 언어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미하지만 전체 수능점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문화자본은 수능점수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제1절 결론: 문화자본, 교육성취 그리고 기회불평등

제2절 정책시사점

제1절 결론: 문화자본, 교육성취 그리고 기회불평등

우리나라의 압축적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요인은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육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도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여유진 외, 2007). 개인은 교육 성취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어떤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자본주의적 성취사회는 세대내 혹은 세대 간 계층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개방사회(open society)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전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갈등론적 시각의 경제적 재생산이론, 문화적 재생산이론, 저항이론과 경쟁론적 시각의 선별이론, 계층경쟁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오욱환, 2003). 본 연구는 이 중 부르디외의 문화적 재생산이론에 기초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자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문화자본과 기회 불평등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학생의 독서향유 형태의 문화자본보다는 문화활동 형태의 문화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바와 상반될 뿐 아니라, 기존의 장미혜(2002), 김경근(2007) 등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추컨대, 문화활동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독서향유는 그만큼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데서 특히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문화향유의 경우 주로 휴일을 이용할 경우가 많아 사교육과의 상충성이 크지 않은 반면, 독서향유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사교육과의 시간 상충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구소득과의 연관성이 높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일 경우 상대적으로 독서향유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독서향유의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고3 수험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인해 평상시의 독서향유와는 다른 패턴의 독서향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의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평상시에는 독서향유 활동이 활발하더라도 고3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이러한 활동을 평상시와 같이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이벤트성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경우 독서향유와 같이 지속적 활동과는 달리 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경제적 여력과 문화적 소양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의 경우 더 많은 문화활동을 접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결과에서 문화자본은 수능 성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나 교육수준을 통제하고도 문화자본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

생의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의 14.7% 정도는 문화자본의 매개효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독서향유 활동은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 모두에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됨으로써 수능 성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에 비해, 문화활동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수능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력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독서향유가 수능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문화활동이 수능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일견 ‘바람직함’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진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독서향유의 경우 교육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본 연구 뿐 아니라 이전의 연구들(장미혜, 2002; 김경근, 2007; 김현주·이병훈, 2007; 장상수, 2008)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문화활동이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이전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고 있다.

제2절 정책시사점

기회의 불평등이 교육성취,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면,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회의 불평등은 불공정한 불평등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의론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기회의 불평등 보정의 중요성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뒷받침 될 수 있다.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결과의 불평등은 다시 또 다른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식으로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 같은 불평등은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은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렇다면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또 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츠(J. Stiglitz)와 헤크만(J. Heckman)이 제안하는 바를 참고할 수 있다.

먼저, 스티글리츠(Stiglitz, 2013)는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은 가장 어린 아동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모(母)가 위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부모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지원 축소안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제안은 결국 어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을 제공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의 이 같은 조기개입에 대해서는 헤크만(Heckman, 2012)도 같은 입장에 있다. 헤크만은 인지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비인지 능력(신체·정신건강, 인내심, 주의력, 열정, 자신감, 사회감성)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비인지 능력이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은 조기에 발달되고, 가족환경(보모의 수, 소득, 교육수준)에 좌우되기 때문에 가족환경이 열악하면 세대를 걸쳐 누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게 된다. 조기교육은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사회감성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이 인지능력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조기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에 선다.

스티글리츠와 헤크만이 시사하는 것은 결국 기회의 불평등을 보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의 사전적 개입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기회의 불평등이

야기하는 결과의 불평등을 보정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리고 사후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불평등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비인지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사전분배(predistribution) 정책은 사회통합, 경제적 효율성,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재분배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진다(Heckman & Rubinstein, 2001; Heckman, 2013).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견되는 한 사전재분배로의 정책적 관심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전재분배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정책대상을 어느 집단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관련이 되는 문제다. 이것은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저개발국 아동의 생활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인간기회지수(Human Opportunity Index, HOI)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존의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관련 정책들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와 기존 교육제도를 재검토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자원배분의 문제는 기존의 사후적 재분배 정책(국민기초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과 사전적 재분배 정책(보육제도, 교육제도 등)간 자원배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교육제도의 재검토는 수월성 위주의 교육제도가 비인지 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고제아이우진(2011). 아버지의 학력과 아들의 성취. 재정학연구. 4(2): 47-87
- 교육부(2013).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
- 구인화·김순규(2002).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 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김경근·변수용(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 김광혁(2010).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빈곤의 기간 및 시기, 정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1): 5-31.
- 김기현(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5(5): 109-142.
- 김영석(2006).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양극화 담론의 지형”. 교육양극화의 현황과 대처방안. 한국교육네트웍 학술대회.
- 김영화·김병관(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1): 155-172.
- 김왕배(2001). 산업사회의 노동과 계급의 재생산: 일상생활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성찰. 한울.
- 김현주·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남현숙·김혜숙(2013). “Bourdieu의 문화자본론적 관점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격차 발생과정 비교”. 한국프랑스학논집 81: 187-211.
- 방하남 외(2004). “현대사회의 가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 아카데미.
- 신명호(2011).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한울아카데미.

-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 연구 28(2): 53-80.
- 오육환 (2003).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교육과학사.
- 장미혜(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26(4): 223-251.
- 장상수(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42(3): 63-85.
- 조수환(1996).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등”, 교육철학 14: 273-288.
- 조우현(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27(2): 67-89.
- 통계청(2013). 통계로 본 여성의 삶.
- 부르디외, 피에르 저. 최종철 역. 200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2004)~7차(2010)년도 조사 사용자지침서.
- DiMaggio P. 1982. Cultural entrepreneurship in nineteenth-century Boston. Media Cult. Soc. 4:33-50, 303-21.
- DiMaggio, P., & J. Mohr.(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pp. 1231-1261.
- DiMaggio, P., & J. Mohr.(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pp. 1231-1261.
- Dworkin, R.(1978), Taking Right Seriously, Harva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1981), What is Equality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N.10.
- Dworkin, R.(2000),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Heckman, J.(2012). "Promoting Social Mobility", Lead Essay, Boston Review(2012. 10)

- Heckman, J. and Y. Rubinstein(2001) "The Importance of Noncognitive Skills: Lessons from the GED Testing Program," American Economic Review 91, no. 2 (2001): 145-49.
- Istvant Hont and Michael Ignatieff(1983), "Needs and justice in the Wealth of Nations", Wealth & Virtue, p. 44. 1983
- Jæger, mads meier(2011). "Does Cultural Capital Really Affect Academic Achievement? New Evidence from Combined Sibling and Panel Data". Sociology of Education 84(4): 281-298.
- Jæger, mads meier. 2011. "Does Cultural Capital Really Affect Academic Achievement? New Evidence from Combined Sibling and Panel Data". Sociology of Education 84(4): 281-298.
- John Rawls(1971). 사회정의론(황경식 역). p.32.
- Locke, John(1988).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cas, S.R.(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al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 1642-1690.
- Macpherson, C. B.(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p. 221.
- Marrero, G.A., J.G. Rodriguez(2010)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growth" ECINEQ Working Paper Series
- Marrero, G.A., J.G. Rodriguez(2011)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the United States: Trends and Decomposition" in Rodrigues, J.G (eds.) Inequality of Opportunity: Theory and Measurement. Research on Economic Inequality. Volume 19. Emerald Books
- Nozick, R.(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 Pew Research Center(2009) Trends in Political Values and Core Attitudes. 1987-2009"
- Roemer, J.(1993) "A Pragmatic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the Egalitarian Planner,"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 146-166
- Rousseau(1984). J.-J, Du contrat social, in Euvres complètes, t. III, Pléiade, p. 351.
- Sen, A.(1984), Resources, Values, and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 A.(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University Press.(이상호, 이덕재 역,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아카데미, 1999.)
- Sen, A.(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Stiglitz, J(2013), Equal Opportunity, Our National Myth, The New York Times
- Van de Gaer, Dirk(1993)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Ph.D. Dissertation,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 Voitchovsky, Sarah(2009)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Chapter 22 in W. Salverda, B. Nolan and T. Smeeding (eds.)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ISSP 사이트: <http://www.issp.org/page.php?pageId=4>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용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금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매일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행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 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 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노인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1-2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제공동연구	이삼식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지역사회보장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_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임신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